

‘교육을바꾸는사람들-좋은교사운동-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주최 토론회(4차)

- 일시: 2020.10.14.(수) 오후7시~9시
- 제목: 학생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방식: 온라인 토론회
- ※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좋은교사운동,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실시간 중계
- 진행

구분	내 용
개회	- 개회(이종태 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발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평가, 교육적인 방안을 찾자 (홍순희 서울위례별초등학교 교사) - 대입 관련 학생평가(내신/학종/수능) 개선방안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학생생활기록부 제도의 폐해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문 (노기원 상명고등학교 교사) - 학생평가, 교육적인 방안을 찾자! - 교육의 질 제고, 실효성있는 정성평가 방안의 모색 - (조현영 인하대학교 교수)
자유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 의견 제안 및 질의응답 ※ 댓글 소개 및 답변
폐회	- 폐회(이종태 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4차 토론회

학생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발 제

- 학생평가, 교육적인 방안을 찾자
(홍순희 서울위례별초등학교 교사)
- 대입 관련 학생평가(내신/학종/수능) 개선방안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학생생활기록부 제도의 폐해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수)

학생평가, 교육적인 방안을 찾자

홍 순 희 (서울위례별초 교사)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는 교육정책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며 국가예산을 막대하게 쏟아 넣으려 하고 있다. 그 속에 학생과 교육은 없고 일자리 창출과 돈벌이만 보이는 듯하다.

기업들의 공채 신규 직원 시험도 줄어들고 있으며 경력직원 채용이 늘어나며 취업의 지각변동이 커지고 있다.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시험 평가 항목에 대하여 56.4%가 다양한 창의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32.4%,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 7.0% 순이었다. 시대적으로 지식을 암기하는 능력보다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학교 교실에서는 여전히 일제식 평가를 고집하거나 기존 세대의 방식으로 학력을 측정하는데 주력을 다 하는 경향이 있다.

대입제도 개선 없이는 평가 혁신에 한계가 있다. 이미 사회는 지금의 평가로 사회를 유지할 수 없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 학생평가의 목적

1) 과정중심평가

바람직한 평가는 학생들의 발달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발달에 관심을 갖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등급을 나타내는 평가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에게는 의미가 없다. 학생들은 교수-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게 된다. 평가는 일순간의 모습을 담기보다는 학생들의 발달을 중심에 두고 과정중심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학생들의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나 수행하는 것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수업 계획과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교사 주도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게 된다.

2) 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한 평가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교사와 학생 1:1 학습도 있지만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교사는 학생들 상호 간의 협력과 교사와 학생 간의 협력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 조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경직된 학습 문화에서는 학생들의 발달이 일어나기 어렵다.

학생과 학생의 협력적인 과정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속에서 학생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 학생들끼리 학습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적절한 개입이 교사를 전문가로 만들어준다.

학습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지 점수로 평가하기보다 친구들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놀이에 함께 참여하는 속에서 상호 의사소통 능력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험지 결과로 평가했을 때 협력과 소통을 무시한 개별 성과로 평가되어 결과만 중요시하는 학생으로 길러왔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가 성장해서 살아갈 미래 세상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살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수업과 평가가 일관되게 협력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토의를 할 때 옆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지,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지, 친구가 한 말에 자기 의견을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지, 이 모든 것이 협력이다. 모둠활동을 할 때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모둠을 이끌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과정이 평가되어야 한다. 활동 결과물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활동 과정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협력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학생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학생을 측정하여 서열을 세우는 것에서 진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자’고 교육부도 교육청도 주장하고 있다. 학생의 발달을 위한 평가란 서열화를 극복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발달에 집중한다. 아래 표에서처럼 누가 더 얼마나 잘 했는가를 객관적으로 신뢰도 높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알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집중한다. 즉 상대적인 우열을 확인하여 모두가 열패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모르고를 진단해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평가는 수업의 끝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 그 학생을 진단하고 모르는 것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평가는 수업의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는 진단과 지원의 순환 과정인 것이다.

〈표1〉 상대평가와 절대평가⁴⁰⁾

	규준참조평가(상대평가)	준거참조평가(절대평가)
교육관	선별적 교육관	발달적 교육관
목적	개인차 변별 상대적 우열 확인	목표 달성 여부 자격 유무 여부 확인
핵심 질문	누가 더 잘 하는가?	무엇을 얼마나 아는가?
기본 가정	정상분포 가정	비정상분포 인정
평가기준	비교집단 내 구성원 득점 분포	사전에 설정한 준거와 수행
강조점	변별도, 신뢰도	타당도, 적합도
결과활용	선발, 분류, 배치	진단, 점검, 자격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업은 협력적이어야 한다. 학생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은 협력적 학교 문화와 학급 문화에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취감이 쌓이게 된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학생들은 발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수업에서 소통하면서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이 수업이고 평가인 것이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따로 분리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다고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일체화하라는 것은 아니다.

2. 학생평가의 왜곡 및 혼란

1) 공부시간에 배운 것만 평가하라고?

수업은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것이다.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수업에만 적용되는 선행학습금지법이 있다.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만을 평가할 수 있고 심지어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고, 교육과정 재구성한 것과 평가 시기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감사하는 조잔한 행정감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핵심성취기준’을 정리하여 현장에 보냈다. 그리고 그 핵심성취기준을 모두 평가하라는 교육청 연수가 있었다. 성취기준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재구성 또는 재구조화하여 이에 따라 수업한다. 그렇다고 핵심성취기준 모두를 평가해서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 역시 교육부에서 학교 현장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현장교사의 민원을 통해 정리되었다.

40) 성장과 발달을 돕는 초등 평가 혁신 27쪽

2) 문항개발 잘하는 것이 과정중심평가라고?

혁신학교에서 학생발달을 중심으로 한 수업과 평가를 하면서 과정중심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교육부에서도 과정중심평가를 많은 현장 교사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7년부터 백워드를 기반으로 평가 문항제작 연수로 변질되어 평가문항을 제작하여 학생을 평가하게 되면서 과정중심평가가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과정중심평가는 학생 발달을 중심에 두고 수업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교육부 주관 연수는 학생들에게 평가할 것을 목표로 하여 문항을 제작하고 수업을 설계하라고 한다. 이것을 백워드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과정중심평가를 현장에서 실천하던 교사들이 많았는데 교육부, 교육청 주관 연수를 듣게 되면서 학생평가에 대한 혼란이 더 커지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는 과정중심평가를 어슴푸레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교사들과 선두적으로 실천하던 교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백워드 교육과정이란 이름으로 현장에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온 듯한 공포감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교육과정과 평가를 뒤집어버렸다. 평가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평가를 목적으로 한 문항을 제작한 후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평가 문항을 누가 잘 만드느냐가 학생평가를 잘 하는 것으로 왜곡하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 원격연수에 백워드를 기반으로 한 학생평가 연수를 개설하고 현장에 과정중심평가 연수를 강제하기 시작하였다. 지역 지원청에서는 연수를 받지 않은 학교를 찾아서 연수를 강제로 배당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도 문항제작 학생평가 연수는 지속되고 있다.

백워드 기반 평가방식에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설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과정을 측정하고 문항제작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성취기준이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가는 것들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증명자료가 있어야만 한다는 평가관을 부추기는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생평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3)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현장에서 과정중심평가로 학생의 발달을 중요시하면서 ‘수업이 곧 평가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수업이 곧 평가다’라는 뜻은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발달의 정도를 고려하여 계획한 수업을 하면서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한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협력 관계와 역동적 관계 속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피드백을 통해 서로 배움이 일어나게 된다. 수업에서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수업이 곧 평가다’라고 하였다.

그런 표현이 일부 교육청에서 이것을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일치시키라는 명제로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 문서, 재구성 계획서, 평가 계획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문서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교사들이 수업을 계획해야 하는 시간에 교육과정 문서작성에 필요 이상의 시간을 쓰게 만들었다. 또한 계획된 것을 평가에 잘 반영시키기 위해 학생평가의 누가기록을 강제하기도 한다. 각 교과학습 발달상황과 행동발달 누가기록을 교육청별로 연간 몇 회 이상의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을 통해 학생이 발달하고 있는가? 기록을 해석해서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기록만 할 뿐이다.

4) 정상분포를 맞추라고?

학교현장에서 하는 수행평가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한 결과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행평가가 괴롭다. 중학교에서는 수행평가 결과를 성취평가제로 등급별로 일정비율로 성적이 분포하게끔 줘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9등급으로 상위 4%에게 1등급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들이 잘 배웠는지 알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분포시켜야 한다. 제도 자체가 학생들의 삶에 무게중심이 있지 않다. 그렇기에 수행평가도 정상분포 곡선에 맞춰 점수를 부여할 뿐이다. 또한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기 위해 수량화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편하다. 그러다 보니 학생발달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도전하려는 교사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진다.

5) 학부모 민원 감당을 하려면 객관적인 것이 최고?

2019년 3월 28일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서는 기초학력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2020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였다. 이는 그동안 혁신학교의 문화 확산으로 과정중심평가로 진행되던 진단활동을 진단평가로 회귀시키고 있다. 심지어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는 결과중심 평가를 통해 성취감을 맛본 사람들이 많다. 일생 동안 과정중심평가를 경험해보지 못한 교사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평가로 과정중심평가를 하라고 하니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하고 학부모 민원의 두려움에 대처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지필평가이다. 교육청 역시 학부모 민원에 민감하다. 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알고 있으나 정책으로 힘 있게 끌어갈 용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지필평가 방식이나 수량화된 수행평가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어 실기평가에서도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다. 수행평가도

과제로 제시하고 수치화할 수 있으며 과제를 제출했는지, 글씨가 예쁜지, 제출한 과제의 분량이 적절한지 등으로 등급을 정하기도 한다. 당연히 객관적인 기준을 중시할 것이다. 그 속에서 학생들의 발달 차이에서 오는 애씀이나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에는 교사의 많은 용기와 교육적 소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그 교사를 보호하거나 함께 연구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학생 발달에 집중해서 과정중심평가를 하는 교사는 고독하고 외롭다.

6) 온라인 수업과 평가

코로나19로 갑자기 찾아온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현장은 일대 혼란이 휘몰아쳤다. 그러다 등교를 1~2일 정도 하게 되었다. 온라인 학습에 교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 수업을 올렸지만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시청하고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등교 수업에서는 온라인 수업에서 배웠던 것을 시험보고 확인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 되었다. 학교는 학원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풀이식으로 운영되어 학교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곳들이 많았다.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중간층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현재 당면 과제가 되었다.

3. 발달을 중심으로 한 평가의 예시

1) 목표 변경: 실과 뜨개질

2019년 6학년 실과 수업을 할 때였다. 아래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성취기준이다.

바느질의 기초를 익혀 간단한 수선에 활용한다.
간단한 생활 소품을 창의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한다.

교과서에는 바느질을 이용한 옷을 수선하는 수업과 뜨개질의 기초를 익혀 목도리를 뜨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흥미도를 보았을 때 옷을 수선하거나 목도리를 뜨는 것에 대한 흥미가 많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바느질의 기초를 익혀 자신이 만들고 싶은 인형 만들기를 했다. 목표를 바꿨더니 학생들이 수업 참여가 높아졌다.

또한 학생들은 뜨개질로 목도리를 뜰 정도의 인내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그래서 목도리가 아니라 목도리의 반 정도 되는 위머로 목표를 수정했다. 학생들이 지치지 않을 정도의 목표로 수정하니 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또한 뜨개질이 서툰 학생은 교사가 계속 도와주고 잘 하는 학생이 도와주고 수시로 도움주기가 일어나는 학년말이라 학급, 학년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변했으며 학생들의 관계도 더 원만해졌다.

2) 속도와 수위 조절: 4학년 자연수의 나눗셈

4학년 자연수의 나눗셈을 공부할 때이다. 1학기 때 (세자리 수)÷(두자리 수)를 배운다. 4학년 1학기 나눗셈이 잘 되어야 5학년에서 약수와 배수, 그리고 이후의 수학 공부에 별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4학년에서 가장 힘든 공부가 나눗셈이다. 1학기에 나눗셈이 나오고 2학기엔 주로 도형이 나온다. 4학년 학생들에게 다음 공부를 위해서 별도의 수학 시간을 조금씩 내서 나눗셈을 한 문제씩 풀게 하였다. 4학년 2학기 때에도 공부할 때 꾸준히 나눗셈을 공부하게 했다. 학생들이 5학년 공부할 때 어려움 없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은 교사들이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세로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가능하다.

3) 수업 내용 변경

6학년 토의, 토론 수업을 하면서 주제를 선정할 때인 2019년에는 아베정권의 무역보복으로 인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주제가 아닌 뉴스로 보도되는 것을 수업으로 가져왔다. 학생들과 뉴스를 다른 각도에서 다룬 것을 보며 각각의 입장이 되어 토론에 참여하였다. 교과서 안의 죽은 토론을 할 때보다 수업 참여가 더 높았다. 학습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불매운동’의 개념과 불매운동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준비과정을 좀 더 여유롭게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였다.

4) 수업 방법 변화(재구성)-사회

[2019년 위례별초등학교 6학년 교사 공동연구자료 발췌]

(1)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교과서에 있는 역사적 사실들에 얽매이기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맞는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적 관점 잡기, 민중들이 중심이 되는 역사 배우기를 진행한다.
- 정해진 역사적 관점에 적합한 주제를 정해 사건을 나열하고 지도해야 할 내용을 재구성한다.
- 역사적으로 삭제되고 축소된 것들 중 의미 있는 내용들을 찾아 가르친다.

(2) 어떻게 배울 것인가?

역사를 생각하면 지루하고 딱딱한 암기과목으로 여긴다. 아이들은 역사는 나와 관련이 없

는 먼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사실 나열식의 역사공부는 역사적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이들이 역사를 좀 더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보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감정이입’과 ‘이해’가 필요하다. 역사를 이해할 때 직접 체험해 보게 하는 수업을 통해 몸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다. 죽은 지식만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닌 내 삶과 연결할 수 있는 숨결이 있는 역사,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는 입체적인 역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연극놀이, 문학책, 사료 등을 충분히 활용한다.

(3) 연극놀이

① 역할 놀이

- 시대 상황을 매우 단순하게 압축하여 상황을 만든 후 역할을 정함. 역할에 몰입하여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그 시대를 경험함. 단순화시킨 상황으로 인해 다소 오개념이 형성될 수 있음에 주의함.
- 신분제의 균열을 표현하기 위해 양반 또는 상민이 되어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놀이에 참여함.
- 실학이 가진 장점과 한계점에 대하여 놀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음.

② 해설이 있는 역할극

- 역사적 상황을 극화시킨 후 교사가 극의 해설을 읽을 때마다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표현해봄.
- 조선시대 후기 세금제도의 폐단을 알아보기 위해 해설이 있는 연극으로 표현하여 흥미를 유발함.

③ 풍속화나 사진 속의 인물이 되어보기

- 풍속화 속의 인물의 행동을 직접 따라해 봄. 그 당시 인물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지를 유추해 봄.
- 정지 동작으로도 표현해보고 움직이는 모습으로 상황을 재현해보기도 함.
- 그 역할에 몰입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속마음 인터뷰를 통해 감정이입을 유도함.

④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 시대 상황을 공부한 후 아이들이 직접 시대 속 주인공이 되어 역할극으로 표현함.
- 친구들의 역할극을 보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음.

⑤ 직접 경험하기

- 서민 문화를 직접 경험해봄, 봉산탈춤 따라 하기, 판소리 듣고 따라 하기 등

★ 사료 활용하기

- 서적이거나 인터넷을 통해 그 시대의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보고 활용함.
- 사료를 통해 그 시대의 모습을 추론하기.

- 다양하게 그려진 풍속화와 서적들을 살펴보고 자료에 나타난 조선시대 여성의 삶 추론해보기.

★ 문학작품 읽기

- 시대를 나타내는 문학작품을 골라 읽으면서 배경지식 쌓기.
- 시대의 인물을 통해 감정이입을 하고 그 시대의 사건에 공감할 수 있음.
-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되는 작품 ‘서찰을 전하는 아이’, 일제 강점기 여성의 삶 ‘명혜’

(4) 과거의 역사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 후기~ 촛불혁명)
가장 치열했던 근현대사.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 ① 한국의 근대화 태동은 언제인가? 조선후기 신분제의 변화
- ② 대동법을 통해 본 조선왕조의 노력들은? 지배층의 이익VS 민중들의 삶
- ③ 다루지 않는 역사 ? 삭제된 조선시대 여성의 삶
- ④ 조선후기 변화된 사회를 해결할 학문-실학
- ⑤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삶 민란의 발생
- ⑥ 흥선대원군과 쇄국정치
- ⑦ 동학 농민군이 꿈꾼 세상
- ⑧ 국권 피탈 과정에서 우리의 대응은?
 전국적인 의병활동과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

(5) 학기별 수업 계획

묶음	수업주제	활동내용
1	조선후기, 신분제도는 왜 변화되기 시작했을까?	- 단원의 제목을 풀이하는 이야기 - 역할극 놀이(신분제도 변화) - 알게 된 점 정리하기
2	조선 후기, 사람들의 생활모습과 문화의 발달 (미술, 국어와 통합)	- 신분제도의 변화로 서민문화 발달(부농, 부상의 등장) - 서민문화 종류와 특징 알아보기 - 풍속화 분석(신윤복 그림 전체 분석, 김홍도 타작, 씨름 분석 후 그림자료를 조각상으로 표현하기) - 봉산탈춤 대본 대표 발표 - 탈 만들고 조선후기 생활모습 풍자해서 역할극 발표 - 수업 후 알게 된 점 정리하기
3	조선시대,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그림 자료로 모둠별 여성의 모습 분석하기(모듬별) - 오늘 날에도 남아있는 여성 차별, 억압적인 모습 찾아보기 - 알게 된 점 정리하기
4	조선후기 세금제도는 어떠했나?	- 조선후기 세금제도(전정, 군정, 공납) - 공납의 문제점이 드러난 해설이 있는 역할극 - 알게 된 점 정리하기

목음	수업주제	활동내용
5	실학은 조선후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학의 발생 원인과 실학이 연구한 분야 안내 - 농민, 상인 입장에서 실학 바라보기(역할놀이) - 양반 입장에서 실학 바라보기(역할놀이) - 정리 후 소감 나누기
6	세조정치와 삼정문란은 백성의 삶과 국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도정치의 의미와 정세 알아보기 - 삼정문란 역할극 - 정리 후 소감 나누기
7	흥선대원군 시대에 국내, 국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선대원군 시대 국제 정세 - 흥선대원군 시대 국내 정책 - 사건별 릴레이 역할극 - 이미지 조각상 만들기 - 정리 후 소감 나누기
8	동학 농민 운동을 통해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농민봉기 - 집강소 장면 해설이 있는 연극 - 정리 후 소감 나누기
9	국권 침탈의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권 침탈과정 - 의병의 의미와 한일 알아보기 - 사진 재현하고 인터뷰 - 정리 후 소감 나누기
10	일제 강점기 생활상	- 영상자료+ 국어과 토의, 토론과 통합운영
11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임시 정부	
12	해방과 분단 정부수립	
13	한국 전쟁	
14	4.19 혁명	
15	5.18 군사 정변	
16	6월 항쟁	
17	촛불혁명	

5) 피드백, 관심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교사가 학생의 수업태도나 변화 정도를 읽어주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주어 자주 반응을 보일 경우, 학생이 교사의 관심을 받고 수업태도와 수업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정을 알게 되면 교사는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을 바라보며 수업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학생에게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교사의 노력과 학부모, 학생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서 학교와 수업에 대한 학생의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수업 참여도가 높아진다.

학생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업의 즉각적인 피드백, 관심 갖기이며, 이는 학생들이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려는 것을 막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교육방법,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이 그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섬세하게 관찰해서 진단한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학생 발달 평가 지원 정책, 방안

1) 입시제도 폐지

평가가 왜곡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입시와 학벌사회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 현실 속에서 평가는 ‘선발적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공정함과 신뢰도, 객관성 등의 문제에 매달리게 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입시제도 개선을 넘어 입시제도 폐지를 해야 한다. 입시로 모든 학령기 공교육을 지금까지 망쳐냈는데 이제는 입시를 폐지하고 학생들을 살려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학생들의 발달에 집중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학교 규모,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화

코로나로 등교를 못하는 이유가 밀집 접촉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배움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는 등교를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작은 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코로나로 인한 밀집 접촉에 대한 걱정을 극복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원격수업보다 등교수업을 선택하고 있다.

3) 교원학습 공동체 활성화

교사가 학생들의 발달과 교육과정을 모두 섭렵하기는 어렵다. 중고등학교는 각 교과별 성취기준과 학생 발달을 연구할 시간이 충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한 교과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체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전체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발달의 정도를 연구해야 한다.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발달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연구공동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 이전 ‘교사 교육과정’까지 연구되었다가 원격수업으로 인해 ‘교과서 교육과정’으로 퇴보한 부분이 있긴 하나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연구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시간을 확보해 주는 정책 지원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4) 업무 정상화(업무 지원팀) - 교육과정 중심학교 운영

학교 업무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교는 행정업무가 먼저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선별하여 과감하게 그 업무를 정리해야 한다.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이 정리되어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다. 문서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마인드 전환과 함께 행정업무도 전환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부터 불필요한 점검사항, 보고문서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관례대로 매년 매 시기마다 보고하는 것을 선별해서 현장에 보내기를 바라본다.

5. 나가며

학생평가라는 말이 언어적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정중심평가도 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할 것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분절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학생이 있다. ‘학생들이 발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란? 수업이란? 평가란?’ 어떠한지 의식이 전환되길 바란다.

수업이 곧 평가다. 학생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수업이 잘 되어야 한다. 이 수업을 왜 하지?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이 일어날까? 앎을 통해 학생이 어떻게 변화되길 바라나?와 같은 질문을 마음속으로 계속 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에서 보이는 다양한 반응들에 교사가 적절하게 피드백해 주거나 학생 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이 물 흐르듯이 흘러 학생들이 걸림돌에 걸려 못 넘어갈 때 교사가 적절히 개입하고 학생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수업이며 평가인 것이다.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수업을 할 때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만든다. 또한 교사 혼자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들의 수업 협의가 활성화되고 수업 속에서 평가가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참고자료〉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혁신, 맘에드림(2016)

행복한 혁신학교 만들기, 살림터(2011)

2019학년 위례별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

대입 관련 학생평가(내신/학종/수능) 개선방안⁴¹⁾

김 영 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I. 들어가며

1.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교육과정과 입시, 중간에 낀 학생들

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정이나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석·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McMillan, 2014, p. 37)이다. 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학습과정과 결과의 개선이고 이를 통한 학습자의 발달과 성장이다. 최근 교육의 흐름 역시 학습자의 주도성과 참여를 통한 성장과 발달이 강조되면서 평가에 대한 관점도 학습의 결과와 서열을 중시하는 평가에서 배움의 과정과 학습자의 성장을 중시하는 평가로 변화하고 있다.

‘5·31 교육개혁안’ 이후 학생의 소질, 적성 및 특기의 존중, 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평생학습사회의 건설과 질 높은 학교 교육을 만드는 흐름이 시작되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가로서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와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하면서, 과정중심평가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발을 위한 평가는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별도의 시험을 치를 수도 있고, 학교교육에서의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학생의 발달과 성장이라는 평가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평가 본래의 목적보다 선발 목적의 평가가 학교교육을 지배하는 흐름이 우리 교육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왔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입시로 인해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 정부 들어서 입시와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음에도 해결된 문제는 없이 상처를 봉합하는 수준에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41) 본 원고는 월간 좋은교사 2018-8월호를 통해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한 「대입제도 딜레마, 대타협은 가능하다」를 기본으로 일부 수정된 원고임을 밝힙니다. 또한 이번 원고는 좋은교사운동의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 대입제도 개선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을 종합한 내부 의견이며, 향후 토론의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는 열려 있는 방안입니다.

2019년도에는 정치적 사건과 입시가 맞물리면서, 수능 중심의 정시는 40%까지 확대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거의 고사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교육과정과 입시제도가 공존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등학교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입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배우는 활동과 크게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다 보니, 입시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서로 충돌하게 된다. 학교에서의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오로지 학습의 결과로서 점수를 측정해서 반영하는 수능 전형은 매우 다른 속성의 입시가 되어 있고, 이런 이유로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2가지를 모두 대비해야 하는 현실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사고력과 활동을 강조하는 학습활동과 결과물을 요구하고, 수능에서는 객관식 5지선다형 문제를 외워서 풀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을 해소하는 것이 입시제도 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2. 대입제도 개선,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2018년, 대입 공론화에서 수능 정시 비율 30% 이상이 권고로 결정되었을 때, 이것이 개선이 될 것인지 악화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균형점이 될 것인지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렵게 내린 이 결론마저도 정치적 사건에 의해 너무도 손쉽게 수능 정시 비율 40% 이상으로 바뀌는 일을 2019년에 겪게 되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오지선다형 EBS 문제집 풀이로 전략한 현재의 수능은 분명히 학교교육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 정시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수능에 억눌렸던 학교교육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던 교사들은 과거로 회귀하는 수능의 확대를 찬성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수능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종의 복잡성과 주관성이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선발의 과정으로서 입시를 생각할 때는 분명 객관적인 변별의 기준은 필요하다. 그러나 변별의 기준을 중시하는 평가로서의 현재의 오지선다형 수능은 EBS 문제집 풀이로 학교교육을 전략시킨다. 수능이 학교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 상당수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을 줄일 것을 주장한다. 만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수능이 주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해법은 수능의 질에 있다. 수능의 질이 달라진다면 수능을 버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문제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토론을 할 정도로 수준과 격조가 있다. 우리 학생들이 교실 수업에서 그런 주제로 토론하는 것은 어떤가? 수능의 질이 문제이지 수능 자체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논점은 현재의 수능이 아니라 달라질 수능이 어떠한 해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능의 활용을 두고 대립하는 지점도 해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학교교육이 강화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수능을 버리면 내신에 주어지는 부담이 커져서 상대평가와 객관성의 요구가 커져 학교교육이 더욱 황폐화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을 버리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적 지형에서 가능하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약 수능을 잘 고쳐서 쓰기로 한다면 논술형 수능과 같은 발전적 논의로 옮겨 갈 수 있다.

다음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정성평가를 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시험 성적만 높다고 적합할까? 적격자 선발을 위해서는 학생의 희망, 특성 등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관찰을 필요로 한다. 한편 정말 중요한 역량은 획일적 객관식 시험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성평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성적 평가는 지금까지 획일적 문제 풀이 위주의 교실 수업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수능을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되고, 정성평가 또한 버려서도 안 된다면 해답의 방향은 분명하다. 수능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정성평가의 적당한 역할을 결합하는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를 ‘수능종합전형’이라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능종합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동시에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정성평가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수능의 절대평가 논의도 쉽게 풀릴 수 있다. 애초에 작금의 논의를 촉발한 방아쇠가 수능 절대평가 문제인데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 경우 변별력 약화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이 축소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절대평가로 인해 문제가 되는 변별력은 정성평가로 채우도록 하면 해결된다.

II. 새로운 대입제도에서 다뤄야 할 5가지 고려사항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대입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그 5가지는 배움의 질, 적격자 선발, 과잉경쟁 완화, 공정성, 학생의 시험 부담 완화이다.

1. 배움의 질의 문제

평가의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학교 교육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객관식 시험 문제 위주의 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객관식 시험을 벗어나서 다양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수업에서도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는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버림받았던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 영역의 활동도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그것은 혁신학교의 입시 성과로도 연결이 되면서 학교 교육의 혁신과 맞물리게 되었다. 그런데 수능 중심으로 입시가 돌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학교교육 역시 과거로 회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입전형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은 학생들의 배움의 질이다. 과연 어떤 전형이 배움의 질을 높일 것인가? 배움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어를 배운다고 한다면 국어 교육의 목표인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능력이 골고루 다루어져야 한다. 미래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강조한다.⁴²⁾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협력하며,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변화시키거나 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다양한 측면의 능력이 계발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능력 가운데서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 것인가? 혹자는 객관식 문제라도 잘 만들어진 문제는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말을 십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능력을 객관식 문제로만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배움의 질의 측면에서 학종은 뚜렷한 장점이 있다. 학종이 도입되면서 수행평가를 통한 질적 평가가 중요해졌다. 이로 인해 기존의 지필평가의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중시하는 수업과 평가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비교과 영역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⁴³⁾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 비록 학종의 도입으로 인해 수업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를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는 학종을 대비시키는 학교에서의 여러 노력들이 학생들의 진정한 배움으로 연결되고 있느냐의 문제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교과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하게 배우고 사고력을 키워서 일정 정도의 학업성취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의 핵심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부 기록이 입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될수록 실적 만들기용 활동들이 일어나게 된다. 활동의 과정에서 학생이 여러 역량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학생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이 실적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현장 교사들 중에 학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상당수 있는데, 주로 내실없는 실적 채우기용 활동에 학생들이 동원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물론 내실있게 수업과 교육과정을 잘 만들어서 학생의 진짜 실력을 키우는 활동도 많이

42) 교육부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moeblog/221237387890>). OECD 교육 2030 사업이 제시한 역량 교육의 목적과 방향 제시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핵심 역량 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적 분석을 통해 종합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핵심 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핵심 역량 교육과 관련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교육과 실제 세계의 연결'을 추구하는 공통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외국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한 핵심 역량 교육 사례 |작성자 교육부.

43) 오마이뉴스(2016.10.10.). “학종엔 교실 혁신의 힘이 있어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지방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변형)
2) “학종에 학교혁신의 힘이 있다고까지는 선불리 말하지 못하겠지만 교실혁신의 힘이 있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학생부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그러시더라고요. 학생부를 잘 쓰려면 ‘어떻게’라는 방법적 문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무엇을’이라는 교육활동의 내용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교육활동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꼽으시는데, 하나는 <교실수업 개선>, 다른 하나는 <학생자치 강화>였어요.”

있고, 학교 현장도 점차 변화하고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왜곡과 부실운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종으로 인한 수업의 변화를 과대 해석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내신을 결정하는 지필평가의 영향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신⁴⁴⁾은 결정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상대평가로 인한 경쟁의 대상이 바로 옆의 학우라는 점에서 경쟁의 체감도가 수능보다 훨씬 높다. 둘째, 변별력과 채점 시비 문제로 인해 객관식 문제에 주로 의존하며 같은 객관식 문제라도 문제의 질이 수능보다 떨어진다는 점이다. 셋째, 교사별 평가가 아닌 공동출제방식으로 인해 시험 문제의 획일성에 간혀 수업도 획일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넷째, 학생들에게 3년 내내 입시의 부담을 준다. 다섯째, 1학년 때 못한 학생은 3학년 때 잘 해도 만회하기 어렵다. 여섯째, 상대평가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수준에 따라 같은 실력의 학생이라도 다르게 평가받는다. 일곱째, 내신 등급의 유리함을 위해 못하는 학생들이 잘 하는 학생들의 들러리를 서도록 과목을 선택하게 만드는 비도덕성이 존재한다.

이 점에서 학종의 개선점이 존재한다. 질 높은 수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종이 학교교육 정상화와 연결된 중요한 입시로 작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학종은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한다. 내신을 교사별 평가로 하고 절대평가로 하지 않으면 지필평가의 질이 개선되거나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을 완화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내신성적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학종 또한 그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 교과전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학종 대신 학생 부교과전형을 더 확대하자는 것은 더욱 문제다. 이는 수능 절대평가와도 연결된다. 만약 수능을 절대평가로 했는데 내신이 그대로 상대평가로 남게 될 경우, 수능보다 더 질 낮은 내신 평가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고, 이는 학생 입장에서 내신 경쟁이 더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져 전혀 좋아지는 점이 없게 된다. 학종에서의 학생부 기록에 대한 논의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조금 있다 대안에서 논하겠지만 이 점에서 학교 지필평가의 기능을 수능의 기능과 통합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능의 질을 개선한다는 전제 하에 학교 지필 평가 대신 수능을 통해 평가하도록 하고, 학교의 평가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대신 일상 수업을 통한 수행능력의 평가에 치중하는 것이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2. 정성평가와 적격자 선발

학생부종합전형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학의 입장에서 적격자 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시험 점수만 좋다고 적합한가? 교사로서의 자질

44) 내신이라는 용어가 학생부 기록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 용법으로는 지필평가에 의한 시험점수를 의미하고 있어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 보이는가 하는 점이 중시되어야 한다. 학종에서도 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학생의 희망이나 특성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옛날보다 한 단계 진전된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정성평가를 포함한 학종에 의해 선발된 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수능 전형에 비해 낮게 나오는 장점이 설명된다.⁴⁵⁾ 입학 이후 학점도 학종 전형 출신의 학점이 가장 높게 나오는 점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이 된다.⁴⁶⁾ 그런 점에서 소위 패자부활의 논리를 앞세워 수능 점수만 높으면 상위권 대학 학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적격자 선발이라는 목적에 어긋난다. 투명성을 앞세워 타당성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기업에서도 시험 점수만으로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대입에 있어서만은 정량적 점수로만 선발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일정 비율은 정량적 점수를 활용하지만 정성평가라는 장점을 배제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3. 학생부 기록의 문제

가. 과열, 과장, 업무 과중의 문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학종의 과열과 과중의 문제는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학생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스펙이 많아지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교사 차원의 기록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인지는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과열의 문제는 첫째,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 학생들은 자율 동아리를 5개씩이나 한다고 한다.⁴⁷⁾ 그런데 전체 학교 중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러할까? 극소수의 극성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 아직은 전체 학교 측면에서 볼 때 자율동아리는 더 활성화되어야 할 영역이지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다. 둘째, 만약 과열되었다 해도 자율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원래 국영수 위주의 공부가 과열 상태다. 그 중에서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스포츠클럽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의 다양한 배움의 과정으로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문제는 아니다. 물론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도 해야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다. 그러나 부담이 원래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부담의 총량 가운데서 부담의 종류가 달라진 것이다. 셋째, 과열 현상은 점차로 진정될 것이다. 왜

45) 대학교육협의회 앞의 자료에 의하면 주요 54개 대학의 입학생 현황 분석 결과 수능의 중도탈락비율은 4.5%로 가장 높은 반면 학종은 1.5%로 가장 낮다. 서울 10개 대학으로 좁혀보아도 수능의 중도탈락비율은 6.0%인 반면 학종은 2.5%로 나타나고 있다.

46) 대학교육협의회 앞의 자료에 의하면 46개 대학 기준 전형별 학업성취도에서 학종이 3.21로 가장 높고, 학생부교과 3.13, 논술 3.14, 수능 3.10으로 나타나고 있다.

47) 동아일보(2016.7.15.). 일반고 자율동아리 활동 참여 비율이 52.8%로 나타났다. 과학영재학교의 경우 평균 287.4%로 학생 1명당 3개 가량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서울지역 외국어고의 경우 평균 120%였다.

나하면 동아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⁴⁸⁾ 학생 차원에서 교과 공부보다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입시에서 더 유리하지 않다. 여전히 교과 점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비교과 활동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는 효과가 있다.

학종 초기에 비해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로 줄여가고 있다. 외부 대회 수상을 반영하지 않고, 교내 대회 수상도 축소할 예정이다. 자율 동아리라든지, 자소서 같은 항목은 실제로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교육을 줄이는 측면만 강조하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학생부 기재 항목은 다양한 측면의 정보의 필요성과 학생들의 과중한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갈 문제다.

교사 입장에서 과장 혹은 허위의 문제는 어떤가? 우선 과장과 허위 기록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라도 학부모의 청탁을 받고 허위 조작을 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교사는 그렇게 할 동기가 없다. 김영란법으로 커피 한 잔도 못 받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교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기록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게다가 학종은 다수의 교사에 의한 다단계 평가의 총합이다. 한두 명의 교사로 인해 전체적 기록이 뒤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 기록을 사실 위주로 기록하도록 요구한다. 미사여구를 기록했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자기 학교 학생에 대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 심정으로 이왕이면 좋은 표현으로 기록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입사 원서를 쓸 때 자기 소개서에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단점을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다. 같은 사실이라도 좋은 쪽으로 기술한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허위로 보지 않는다. 회사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평가한다.

현실적으로 학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학종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는 숙제로 남는다. 실제로 적은 건수라 할지라도 조작과 허위기록이 드러나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를 고수할 명분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부 기록 개선은 교사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기록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외부에서의 봉사활동이나 개인별 독서활동을 굳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이유는 없다. 이는 면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수상기록의 경우도 교과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입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소서도 외부 영향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유지할 필요없이, 현장 에세이 정도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

48) 베리타스알파(2018.2.20.). 전문가들은 학종이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주목하는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해 서울대가 공개한 '2018학년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에서도 동아리 개수보다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주요 평가요소로 둔다고 밝히고 있다.

나. 친절한 성적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과별 세부특기사항 부분이다. 교사로서도 기록의 부담이 크고 학생들 간의 편차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간소화와 신뢰성 높은 기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종의 평가 요소를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은 기록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학습의 과정이나 결과를 풍성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좋은교사운동에서 제안한 친절한 성적표가 그 대안이다.⁴⁹⁾ 교과별 세부 능력을 카테고리화하여 성취수준을 표기하게 하고 그것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서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교사 입장에서도 기록을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고, 대학 입장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 풍부해진다. 또한 이는 지필평가보다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발견되어질 역량이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 혁신을 견인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표1. 친절한 성적표 양식]

과목	평가영역(코드)	평가 방법	성취도		세부특기사항
			1차	2차	
도덕	개념 이해(01)	학습지/지필고사	C	B	학기 초 수업에 대한 흥미가 약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고 보고서 작성과 발표 능력이 많은 향상을 보임. 창의적 질문을 많이 제기함. 사회 현상을 윤리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이 탁월함.
	논리적 사고력(02)	보고서 작성	C	B	
	지적 호기심(03)	학습지(질문란)	C	A	
	경청(04)	학습지/태도관찰	C	A	
	작문력(05)	보고서 작성	C	B	
	발표력(06)	발표	C	B	
	윤리적 사고력(07)	보고서 작성	C	A	

이 외에 대학의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사정관제와 같은 외부자 참관 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4. 과잉 경쟁 완화의 문제

과잉 경쟁의 완화는 대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무엇이 과잉경쟁인가? 과잉경쟁과 적정 경쟁의 판단 기준은 학생들의 삶의 질이 될 것이다. 과거와 같이 대학입학을 목표로 해서 3당 4락해야 하는 현실을 오늘의 학생들에게 다시 강요해야 하는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고등학교 시기에 학습을 더 많이 하면서도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넘어서도록 하는 경쟁이라면 그것은 과잉경쟁이라 할 수 있다. 성인들의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것도 삶의 질을 위

49) 김진우(2013). 기로의 성취평가제 어디로 갈 것인가. 좋은교사운동 정책토론회 자료집.

해서다. 과로사 판정 기준이 주당 60시간이다.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이 기준을 넘게 만드는 구조는 과잉경쟁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의 학습시간이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넘어 평균 70시간(일반고)~80시간(특목고)을 넘는다는 사실이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는 학생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균형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분명 과잉경쟁이라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거의 모든 조사에서 세계 꼴찌 수준으로 나타난다. 초등학생들의 놀이시간은 부모 세대에 비해 급감하였다.⁵⁰⁾ 수면시간도 부족하다. 더욱 애석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 효율은 핀란드의 절반이라는 사실이다.⁵¹⁾ 가장 큰 손실은 학교를 다닐수록 공부를 싫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일찍이 앨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불필요한 지식을 위해 하루 16시간씩 허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잉경쟁을 유발하는 교육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사회구조가 변하지 않고서는 과잉경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교육제도가 만들어내는 과잉경쟁도 있다.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쟁마저도 교육 제도가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다. 과잉 변별이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

상대적 변별을 하기 위해 과도하게 어렵거나 치졸한 문제를 내게 되고 이것이 충분히 우수한 학생들에게 끝없는 과잉 경쟁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런 문제까지 풀기 위해서는 과도한 시간을 투입해야 하고, 그것이 과잉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의 이와 같은 경쟁으로 인해 중하위권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학습을 포기하고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생들은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는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변별력 문제가 다시 등장하면서 결국 변별력을 위해서는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라고 생각해보자. 사회는 그 인원을 추리기 위해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해 10%의 인원을 선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자. 교육제도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시험을 쳐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기 시작한다. 그런데 점수가 나오면서 학생들의 서열은 더욱 세밀해졌다.⁵²⁾ 10%가 아니라 0.1%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의 서열도 성적순대

50) 경향신문(2014.4.25.)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매일 하루 1시간 이상 놀았다는 비율이 20.6%로 부모들은 68.6%인데 비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51) PISA 수학 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핀란드 학생의 공부 시간이 4시간 22분인데 비해 한국은 8시간 55분으로 2배 정도이지만 성취도는 544점 대 542점으로 비슷하다.

52)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2017, 김영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점수가 학교교육을 지배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관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들이 선택하는 척도가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교육기관이 엄밀한 평점을 매겨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을 때, 수백만 학생과 교사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평점은 비교적 새로운 발명품이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대학생은 옥스퍼드 대학교를 떠날 때 학위를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최종 평점으로 누구는 74점을 주고 누구는 88점을 준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다. 정기적으로 엄밀한 평점을 매기기 시작한 것은 산업시대의 대중 교육제도이다. 공장과 정부 부처가 숫자 언어로 사고하는 데 익숙해지자 학교가 그 뒤를 따랐다. 초기 학교는 학생의 계몽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곳이었고, 점수는 그저 성공을 측정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학교들은 곧 높은 점수를 받는 일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236쪽)

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학의 서열은 또 다시 학생들의 서열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제는 10%가 아니라 1%, 0.1%의 구분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학생들의 경쟁은 10% 안에 들기 위한 경쟁을 넘어서 1% 안에 들기 위한 경쟁으로 심화되었다. 그것도 상대적 경쟁이기 때문에 무한경쟁으로 비화된다. 톡걸이를 10개만 해도 훌륭했는데 이제 100개를 해도 옆 친구가 101개를 하면 102개를 하기 위한 경쟁으로 과잉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톡걸이 대신 수학을 넣어보면 더 실감이 갈 것이다. 수능 수학 30번은 정답률이 2% 미만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마도 고등학교 기간 동안 약 3,000시간의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⁵³⁾ 3,000시간은 3년간 학교에서 보내는 정규교육과정에 맞먹는 시간이다. 그 시간은 학생들이 보다 의미 있는 활동에 투입했어야 할 시간이다. 이미 충분히 잘 하는 학생들을 더 세밀히 변별하기 위해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되고 무의미한 과잉 경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평가제도가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입 전형을 다르게 설계한다면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곧 과잉 변별을 버리는 것이다. 일정한 절대 수준에 도달하면 충분하다고 동급으로 인정하면 된다. 그 절대 수준은 학생들의 적정학습시간에 기초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 학생이 학교수업시간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주당 50시간의 학습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따라오는 질문은 그 절대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이 많다면 어떻게 변별하여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지점의 고민은 대학이 해야 한다. 더 이상 점수로 변별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특성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서 선발하면 된다. 학생들의 관심과 장점은 다양하다.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세울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학의 학과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고르면 된다. 그것이 어렵다고 하여 수능이나 내신을 통해 한 줄 세우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을 무의미한 과잉 경쟁으로 몰아넣는 행위다.

혹자는 그렇게 될 경우 경쟁의 압력이 수능이나 내신 점수가 아닌 면접의 영역으로 옮겨가며 풍선효과에 의해 면접의 영역에서 과잉 경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면접을 통한 정성평가의 경우 학생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 줄의 경쟁으로 분산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물리에 관심이 많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호기심이 많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봉사심이 투철할 수 있으며, 어떤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을 수 있다. 어떤 학과에서 어떤 학생을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다. 한 줄의 경쟁보다 여러 줄의 경쟁의 압력이 더 완화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단 대학이 면접을 본고사형 시험과 같은 형태로 운영한다면 이는 새로운 과잉

53) 학생들은 대체로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고, 주당 20시간 정도를 수학에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000시간, 3년 동안 3,000시간이 소요된다. 정규교육시간은 주당 35시간*34주*3년=3570시간이다.

경쟁을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면접도 그것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전공 적합도를 보다 중시할 수 있게 되고, 사교육 개입 요인은 줄어들 것이고, 개인의 희망이나 특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은 추천이다.⁵⁴⁾ 일정한 범위 내에 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으로 뽑는다면 경쟁의 압력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추천은 합리적이다. 어차피 자격이 동등하다면 추천으로 뽑아도 별 문제가 없다. 변별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문제는 추천이라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수용이 될 것인가의 문제다. 추천은 요행이라는 인식이 있고, 추천에 의해 당락이 갈린 결과를 패자의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톨스의 무지의 베일을 가정한다면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조건이므로 추천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절대평가는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이것은 수능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내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수능만 절대평가를 하고 내신은 상대평가로 남아 있다면 경쟁 완화의 효과는 사라지거나 더 악화된다.

내신 절대평가와 관련하여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 고교 체제의 문제다. 내신 절대평가를 하면 특목고가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일반고나 지방에 유리한 것이 상대평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다. 특목고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전체학교 학생에 대해 상대평가라는 더 큰 악을 용인하는 것이다. 특목고생은 원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다. 이 학생들을 특정 학교에 모으도록 하는 것은 허용해주면서 대입시에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특목고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교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혹은 유명대학에 대해 특목고생 선발 비율에 가이드라인을 주면 된다. 이 문제는 특목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성적순 선발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에 해당한다. 사실상 이 문제는 대입제도와의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교교육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고교체제에 대한 논의가 맞물려야 할 이유다. 그러나 특목고 체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절대평가를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54) 강태중(2015.2.27.) 학교교육과 평가, 그 미래방향을 모색한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토론회 자료집. 강태중은 추천은 커트라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측정이 자체적으로 지니는 한계나 모호함이 있는데, 커트라인의 인위성에 근거하여 사실상 비슷한 학생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다. 즉 동등한 추천권을 부여하고 추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욱 타당한 선발법이라는 것이다.

5. 공정성의 문제

가. 공정성의 의미와 실제

우선 가장 논란이 되는 공정성 문제부터 살펴보자.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수능이 공정하고 학종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⁵⁵⁾

공정성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공정에 대해 복잡한 논의를 생략하고 대중이 이해하는 논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소위 금수저에게 더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실력대로 경쟁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능은 공정한가? 모든 학생이 같은 날 똑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치르고 채점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공정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범위를 넓혀보면 그것만으로 공정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족집게 과외를 받고, 어떤 학생은 공부방도 없는 조건에서 공부했을 때 이 둘을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고 하여 공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공정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형식적 공정. 또 하나는 실질적 공정이다. 똑같은 틀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형식적 공정이라면, 약자의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 실질적 공정이다. 그런 점에서 금수저와 흙수저가 똑같은 시험 문제를 치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게임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수능이라는 게임은 사교육 요인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게임이다.⁵⁶⁾ 시험장 바깥의 요인까지 고려하면 수능이 공정하다는 명제는 성립되기 어렵다. 다만 주관적 평가 요소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높을 뿐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그렇다면 학종은 공정한가? 학종 또한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수능에 유리한 학생은 학종 또한 대체로 유리하다. 요컨대 수능이나 학종이나 금수저에게 유리하지 않은 전형이란 없다. 다만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 점에서 수능과 학종 전형 중에서 어떤 것이 보다 더 금수저에게 유리한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학종이 깡깡이 전형을 통해 결과적으로 금수저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라는 가설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55) 강원일보(2018.4.26.)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등 23개 교육단체는 25일 수시·정시 통합과 수능 절대평가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수능전형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정시 수능전형 확대 반대를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확대를 요구해 온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공정한 정시 수능전형 비중을 최소 50% 이상 높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수시 이월 인원 감소로 정시가 축소되고, 수시·학종은 그야말로 깡깡이·금수저 전형이자 불공정한 음서제로 변질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권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56) 송기석·한국교육행정학회(2016.9.21.)의 교육정책포럼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해법 탐색’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 요소에 대한 설문에 대해 논술(4.4), 수능성적(4.2), 내신성적(4.0), 비교과기록(3.6), 자소서와 교사추천서(3.6)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요 54개 대학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⁵⁷⁾ 학종의 경우 45.3%이고, 수능의 경우 35.2%였다. 약 10%의 차이가 난다.

[표2. 전형별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수능	실기 (특기자 포함)	기타	전체
수혜	18,876	23,445	4,267	24,512	5,559	81	76,740
	(45.3%)	(48.8%)	(34.2%)	(35.2%)	(37.0%)	(11.8%)	(40.9%)
비수혜	22,838	24,574	8,205	45,199	9,471	604	110,891
	(54.7%)	(51.2%)	(65.8%)	(64.8%)	(63.0%)	(88.2%)	(59.1%)
전체	41,714	48,019	12,472	69,711	15,030	685	187,6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4분위 이하의 비율이 학종의 경우 31.3%이고 수능의 경우 23.1%로 8.2%p 차이가 나타났다. 9분위 이상은 수능이 학종보다 10.4%가 높게 나타난다. 수능 전형 합격생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⁵⁸⁾

[표3. 전형별 소득 분위 분포]

전형 유형	소득분위										전체
	기초생활수 급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이상	
학생부 종합	1,800 (4.3%)	4,218 (10.1%)	3,225 (7.7%)	2,173 (5.2%)	1,656 (4.0%)	1,473 (3.5%)	1,443 (3.5%)	1,549 (3.7%)	2,077 (5.0%)	22,100 (53%)	41,714 (100%)
수능 위주	1,181 (1.5%)	4,918 (7.1%)	4,619 (6.6%)	2,964 (4.3%)	2,354 (3.4%)	1,947 (2.8%)	2,186 (3.1%)	2,314 (3.3%)	3,048 (4.4%)	44,180 (63.4%)	69,711 (100%)

학종 전형 합격생 중에는 기회균형 전형이 포함되어 있다고 반론할 수 있다. 하지만 기회균형전형에 해당하는 비율은 크지 않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⁵⁹⁾

이 외에 또 하나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이 어떤 전형을 통해 더 많이 합격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이 모두 고소득층이

57)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 학생부전형의 성과와 고교 현장의 변화. 국회의원 김세연·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포지엄 자료집.

58) 강기수, 조규판(2017). 대입전형유형별 입학생 특성 분석, 동아대

59) 2019년 전형에서 고른기회전형 선발인원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를 모두 합한 결과 전체 모집인원의 2.5% 정도였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교육을 많이 받았음은 분명하게 나타난다.⁶⁰⁾ 아래의 자료를 보면 수능전형을 통해서도 자율고/특목고 합격 비율이 23.8%인 반면 학종의 경우 18.7%로 나타나고 있어 수능 전형이 자율고/특목고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 전형별 학교 유형에 따른 합격 현황]⁶¹⁾

고교 유형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특기자 포함)		수능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일반고	42,846	74.7%	44,468	86.7%	18,119	75.5%	12,092	58.3%	66,110	73.9%	183,635	75.4%
자율고	5,633	9.8%	4,237	8.3%	4,039	16.8%	2,069	10.0%	14,976	16.7%	30,954	12.7%
특목고	5,080	8.9%	364	0.7%	1,571	6.6%	4,252	20.5%	6,303	7.1%	17,570	7.2%
특성 화고	3,179	5.5%	1,660	3.2%	28	0.1%	769	3.7%	781	0.9%	6,417	2.6%
기타	625	1.1%	535	1.0%	236	1.0%	1,551	7.5%	1,267	1.4%	4,214	1.7%
합계	57,363	100.0%	51,264	100.0%	23,993	100.0%	20,733	100.0%	89,437	100.0%	242,790	100.0%

한편 더미래연구소는 서울대의 경우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전형을 제외한 학종일반전형에서 자사고 특목고 학생의 비율이 더 높다고 반론한다.⁶²⁾ 그러나 이 반론에는 허점이 있다. 지역균형전형 대상 학생들은 다른 대학교의 경우는 학종일반전형에 포함될 학생들이다. 이를 제외하고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를 포함할 경우 일반고 합격생이 더 많다. 2013학년도에 비해 2018학년도에 자사고/특목고생의 비율이 4%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 시기에 자사고의 절대 숫자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특이한 점이 아니다.

보다 결정적 반론은 이것이다. 수능 성적 상위 10%의 비율을 비교하면 외고/국제고가 일반고보다 4.2배나 높게 나타난다.⁶³⁾ 이는 만약 수능 전형이 100%로 확대된다면 외고/국제고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일반고와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의 뚜렷한 격차는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다. 수능은 재수생에게 훨씬 유리하다. 그런데 재수생 비율은 강남권이 압도적으로 높다.⁶⁴⁾ 이로 보건대 수능 전형이 확대될수록 서울권 그 중에서도 강남권 학생의 합격 비율이 훨씬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반면 학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고와 지방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⁵⁾

60)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7.9.28.) 고1대상 학교유형별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과학고/영재학교(37.7%), 광역단위 자사고(35.8%), 전국단위자사고(22.9%), 외고/국제고(16.8%), 일반고(13.7%)로 나타났다.

61)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 앞의 자료.

62) 더미래연구소(2018.3)보고서.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

6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2017.2.10.). 수능모의고사 성적 상위 10% 학생 비율이 외고/국제고는 36.6%로 일반고(8.7%)의 4.2배에 달한다.

64) 조선일보(2015.8.24.). 수능 고3 재학생 대비 재수생 비율이 강남의 경우 83.5%, 서초의 경우 71.3%로 나타나 서울시 평균 49.6%보다 높고, 전국 평균 26.5%보다 월등하게 높다.

65)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 앞의 자료. 서울소재 10개 사립대학 2017학년도 입시 결과 학종의 경우 수도권이 56.1%, 수능의 경우 70.6%로 수도권이 수능 전형에 유리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학종이 기회의 문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서울대학교는 자체 분석을 통해 정시 전형이 50% 수준으로 늘어나면 강남 합격생이 2배 가량 증가하고 일반고가 급감하며 도농간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다.⁶⁶⁾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공정성의 관점에서 지지를 받는 것은 수능 전형이 아니라 학종이 분명하다. 학종이 흡수저 전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금수저 전형이 아님은 명백하다. 학종을 금수저 전형이라 한다면 수능 전형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학종이 수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사교육의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종에 유리한 학생들은 대체로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이다.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교육을 통해서 만회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수능은 사교육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방식이다.

나. 공정성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법

이 대목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공정성 프레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다. 사교육 요인이 얼마나 작용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대입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례로 EBS 연계 정책을 들 수 있다. EBS 문제집 연계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논거로 추진되었다. 실제로 EBS 연계가 사교육을 줄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사교육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거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여도 사교육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금기시된 것들이 있다. 질 높은 교육과 사교육은 딜레마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고, 현실에서는 사교육 프레임이 항상 강력하게 작동하였다. 이는 우리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경향으로 작용해 왔다.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평가 방법을 통해 계층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시도는 애초부터 잘못된 시도다. 어떤 평가도 부유층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법은 없거니와 그런 방법을 억지로 고안해내려고 할수록 교육의 질은 하락한다. 사실 수능이나 학종이나 가난한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다. 가난한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기회균형전형밖에 없다.

우리가 참으로 대입에 있어서 계층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중시한다면 정공법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만약 우리 사회가 가난한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66) 국민일보(2018.5.10.).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확대(안) 검토 결과 보고서에는 2018학년도 신입생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정시비율을 50%로 높이면 강남 합격생이 2배 가량 증가한다고 한다. 수시 합격 배출한 일반고는 305곳에서 171곳으로 급감한다. 도농 격차도 커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전에 중앙일보(2017.3.27.)에서도 보도되었다. 서울대 권오현 전 입학관리본부장은 수시 대 정시 비율을 7대 29로 잡아야 학교 다양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서울대가 정시 대 수시 비율을 5대 5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산고, 휘문고 등 수능 성적이 높은 250개 고교의 합격생 수가 늘어난 반면 일반고 중심의 517개 고교의 합격생 수가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학교 다양성이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다.

합의할 수 있다면 기회균형선발을 더 확대하는 방식을 취해야 옳다. 예컨대 소득균형선발의 개념을 창안할 수 있다.⁶⁷⁾

큰 틀에서 소득균형선발과 같은 개념의 선발이 이루어진다면 사교육에 따른 공정성 논란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우리는 대입 전형의 가치를 배움의 질을 높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논쟁할 수 있게 된다.

6. 학생의 시험부담 완화

일반계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위해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시험은 수능시험과 같은 외부평가, 학교에서 치르는 내부평가, 논술이나 면접과 같은 대학별고사가 있다. 내부평가는 다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된다. 종합하면 수능, 지필평가, 수행평가, 대학별고사, 이렇게 4개의 시험을 모두 준비하고 있어야 대학이 요구하는 여러 전형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충실하게 대비하면서도 수능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한 수능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학종의 최종 단계에서 치르는 면접 시험도 대비해야 한다. 학교 수업만 충실히 들어서 4가지를 모두 대비하기란 도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통 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강의나 단과 학원, 종합학원 등을 통해 문제풀이 요령을 잘 터득하고, 기출문제나 학원에서 제공하는 다소 어려운 모의고사 등을 장기간 풀어보아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기출문제나 모의고사에 시간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기본이 된다. 선행학습-기본개념-심화개념-기출문제-모의고사 등을 단계적으로 충실하게 학습해야 고득점을 맞는다.

학교 지필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잘 들어야 한다. 수업에서 교사의 강의를 꼼꼼하게 듣고 참여하다가, 시험에 임박해서 단기간의 집중학습을 해 주어야 높은 등급을 받는다. 평상시 수업을 통해서 대비가 힘들면 동네 보습 학원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수행평가는 매우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부담스러운 시험이다. 학기 내내 성실함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활동의 성격에 따라서는 미술 실력, 음악 실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의 과정이므로 소홀히 하기는 어렵다. 학생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과목당 3-4개의 수행평가를 치러야 하고, 시기적으로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0과목을 생각할 때 20~30여개의 수행평가를 한 학기 동안 해내야 되는 학생들의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67) 소득에 따른 합격생 쿼터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유명 대학의 합격 정원을 소득 상위 10% 계층에 대해서는 10~20%이상을 선발하지 않도록 하고, 소득 하위 10% 계층 학생이 10% 정도 선발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공립대부터 적용하여 사립대로 확대하고 재정 지원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매우 대담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할 것이고, 기술적으로 논의할 점이 많아 여기서는 취지만 제시하고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각기 다른 형태의 시험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은 학생들에게 매우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고1 정도에서 내신 등급을 잘 받지 못한 학생 중에는 아예 학교 수업은 포기하고 수능에 올인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대입 준비가 된다.

대입제도의 개선을 생각할 때에는 학생의 입장에서라도 입시가 좀 더 단순해져서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학습 부담을 줄이는 문제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으나, 시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Ⅲ . 종합적 대안

1. 기본적 지향

이제 새로운 대입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입제도에 대한 요구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조정함에 있어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삶이다.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움의 질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 배움은 매우 협소하다. 배움의 영역은 훨씬 더 다양하다. 다양한 배움이 가능하고, 배움의 결과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입제도는 그것을 촉진하여야 한다.

둘째, 과잉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상대평가와 같은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과잉 변별과 과잉 경쟁은 억제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과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 소수의 학생만 참여하고 다수가 소외되는 수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의 자율적 전문적 기획력이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한다. 대입제도는 그러한 수업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넷째, 사회적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가난한 학생이라도 불리하지 않는 전형을 지향해야 한다. 완전히 불리함을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그 격차를 최소화하는 전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 전형의 방법을 넘어서 사회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학교 교육을 보호하는 선에서, 과잉 경쟁을 촉발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격자 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2. 종합적 대안 : 논술형 수능 도입+수능종합전형+학생부종합전형

가. 논술형 수능의 도입

만약 수능의 질이 달라진다면, 그리고 수능을 활용하는 맥락이 달라진다면 수능 위주 전형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우리가 수능에 부정적인 이유는 수능이 학교 교육의 질을 저하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자격고사화 또는 수능 비중 약화를 주장하고, 내신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무작정 수능을 없애거나 약화시킬 경우 수능 대신에 입시의 주요 수단이 될 내신이 오히려 배움의 질과 경쟁 상황에 더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내신은 더욱 상대평가 체제와 객관성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비교과 영역마저도 더욱 입시에 종속되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한국 사회에서 수능이 지니는 절차적 공정성은 버리기 어려운 가치가 되어 있다. 대중적 요구는 수능을 더 강화하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대중의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득해내지 못하는 이상 대중의 요구를 거슬러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수능을 버릴 수 없고, 버려서도 안 된다면 수능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것은 곧 내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논술형 수능이 가진 장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달성 여부를 타당성 있게 평가할 수 있다. 우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대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등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분야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분야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서술하는 표현까지 이르러야 성취기준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수업을 통해 얼마만큼의 성취를 했는지 여부를 묻고 쓰게 하는 평가는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게 된다.

둘째, 교육의 결과로 형성된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초·중·고 모든 교육이 학생에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논술의 과정은 그 자체로 종합적이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의 교육을 통해 축적된 사고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에서도 논술형 수능을 선호한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 어떤 인재가 우수한 인재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대학이 오랜 시간 동안 대학별 고사에서 논술을 해 온 것도 논술이 학습능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일, 수능이 논술형 수능으로 전환될 경우 전형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인 학종보다 논술형 수능 결과를 중시하는 수능 전형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외부평가로서 객관적인 학업성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학교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내신성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학교 내신만 가지고는 학생의 객관적인 학업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외부평가인 논술형 수능을 통해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수능체제가 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다. 목표 달성 여부를 지금의 수능과 같은 오지선다형 수능으로 평가할 수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견인할 수도 없다. 현재의 수능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논술형 수능이 도입될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견인할 수 있고, 평가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학생들마다 각기 다른 선택과목을 하나의 평가체제에 담기란 매우 불가능하다. 그러나 논술형 수능이 도입될 경우, 교과군별 논술을 통해서 국어, 사회, 과학, 수학 등을 측정할 수 있고, 범위를 좁혀서 과목별 논술을 시도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평가체제의 도입은 고교학점제 정착이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반면 논술형 수능 도입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첫째, 사교육 유발 우려다. 논술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술형 수능이 도입될 경우에 논술 사교육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참여정부 당시 대학별 논술이 확대되면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충분히 논술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신뢰를 주어야만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말하기,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수행평가나 내신 평가에도 말하기 평가, 글쓰기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 수업에서 비판적 읽기, 탐구 수업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논술형 수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등학생부터 글쓰기 중심의 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논술로 인한 사교육 유발을 줄이려면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가 가능하다는 신뢰와 함께, 논술의 난이도도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대학별 논술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영국의 A-level이나 IB와 같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 사고력 중심의 논술이어야 한다.

논술형 수능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점관 뿐만 아니라 출제자도 고등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사교육의 여지는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사교육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교육 의존 정도를 고려할 때에, 현 수준보다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설령 사교육을 받더라도 사고력을 키우는 사교육은 지금의 사교육보다 긍정적이라 말할 수 있다.

둘째, 논술이 모든 학생들의 발산적 사고를 견인할 수 있는 평가체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논술형 수능을 도입할 경우 학교의 수업과 평가가 모두 변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에서부터 사고력과 논리력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상당수 학생들의 발산적 사고 견인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견인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채점의 객관성 확보와 실현 가능성 우려다. 전체 학생들의 논술 문제를 객관적으로 채점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부분이다. 이 문제는 논술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해결할 수 있다. 채점의 객관성은 같은 답안지를 최소 3명이 평가하도록 하고, 채점관 교육을 통해서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B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채점 전 모의 채점을 통한 채점 기준 조율, 스파이 답안지를 통한 채점 검증, 채점에 대한 이의제기 시스템 운영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직 교사들을 채점관으로 양성해서 투입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임용고사 등에서 논술형 채점은 이루어지고 있다.

논술형 수능이 가진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시대 변화 속에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지금과 같은 문제풀이식, 단답식, 정답찾기식 교육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논술형 수능 도입을 통해 교육패러다임의 조속한 전환이 시급한 때라 할 것이다.

나.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대입은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두 트랙으로 단순화된다.

수능종합전형이란 논술형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된 가운데 수능 점수와 학생부의 정성적 기록을 결합하여 선발하는 전형을 의미한다. 수능종합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비교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내신점수와 정성평가의 결합이듯이 수능종합전형은 수능점수와 정성평가의 결합이다. 그 비중이 내신과 수능 중에서 어떤 것이 높느냐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수능이라는 외부평가의 절차적 공정성과 신뢰성을 채택하는 한편 수능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내신은 지필평가로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미래 역량에 대한 평가에 집중함으로써 수업을 혁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상대평가 체제를 탈피함으로써 과잉 변별에 의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최종 변별은 점수에 의한 변별이 아니라 학생의 특성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면접을 통해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에겐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수능과 학생부 반영 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내신은 일정 부분 반영되어야 한다. 수능과 같은 지필평가로 평가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행평가 위주의 내부평가가 결합이 되면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여전히 학생부만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왕이면 수능점수까지 포함되는 전형이 대학들로서는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대학이 선택할 몫이다. 단 학교교육의 과정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학생부의 의무 반영 비율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형으로는 학생부를 제외한 수능점수와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외에 특기자 전형은 현행처럼 유지될 수 있다. 다만 논술 전형의 경우 새로운 수능과 수행평가를 통해 그 기능을 흡수한다고 보고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학교의 지필평가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수능으로 흡수된다면 학교의 지필평가 기능은 약화되고 수행평가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친절한 성적표’ 방식으로 이행하게 되면 지필평가의 비중은 낮아지고 수행능력별 평가가 중요해진다. 그렇게 되면 학교의 정기고사는 폐지하고 수행평가 위주의 상시 평가만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치르는 정기고사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최종 평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길게 보고 준비하게 된다. 수능을 한 날 한시에만 치를 필요는 없다. 토익처럼 정기적 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학점제에 걸맞게 한 코스가 끝나면 외부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1학기 단위로 제공하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사는 정기고사 출제와 관리에 따르는 업무로부터 벗어난다. 대신 학생에 대한 개별적 관찰과 상시 평가라는 교육 본질에 맞는 평가를 하게 된다.

학교 내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신뢰성을 담보하는 교사별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교사별 평가의 성패는 교사의 수업기획력에 달려 있다. 교사별 평가는 고교학점제 시행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학교 내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행평가의 기준을 성취기준에 맞게 정립하고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가 주도하여 (가칭)평가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평가의 질을 검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현존하는 고교체제는 새로운 대입제도와 내신 제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정 학교에 성적 우수학생이 몰리고, 이 학생들이 새로운 대입제도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가져간다면 새로운 대입효과가 평가받기도 전에 학교 효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다. 구조적인 고교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수능종합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 모두 지금과 같이 부모의 경제력 효과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회균형 선발의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수능의 질을 개선하고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기존 내신의 지필평가 부분을 수능으로 흡수하고, 내신은 교사별 평가 체제 하에서 수행평가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에 기초하여 수능 위주의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형요소	비고
수능종합전형	수능+정성평가(면접, 학생부)	논술형 수능,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 및 교사별 평가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정성평가	내신절대평가 및 교사별 평가, 수능최저등급 폐지

다. 새로운 대입 도입전략

1) 도입 시기

논술형 수능의 도입 시기가 중요하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야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초5 학생들이 대상이 된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논술형 수능 도입 시기를 2028학

년도부터 적용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논술형 수능을 학교에서 대비시킬 수 있느냐는 논쟁에 대해 공교육이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말하기, 글쓰기 평가를 목표로 하는 수업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미 말하기, 글쓰기 평가를 통해 관련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현재 이루어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 논술형 평가에 맞는 핵심 성취수준 중심의 대강화된 교육과정을 만들고, 논술형 평가 체제를 만들 수 있다.

만일, 공교육이 논술형 평가체제를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 도입 시기를 더 늦출 수도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글쓰기, 말하기 중심의 평가체제를 만들어 교육한다면 이들이 고3이 되어 2032년에 치루는 입시(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로드맵을 그릴 수도 있다. 최소한 이러한 청사진이 있어야 향후 10년의 기간을 이행과정으로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2) 단기대책

① 수능은 90점 이상만 되면 같은 수준의 수학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는 인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절대평가는 등급제로 시행하도록 하고 1등급의 기준은 과잉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절대평가 도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면, 최소한 1등급의 비율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최소 10%선에서 1등급을 부여할 수 있어야, 고교학점제에서 과목선택권을 일부라도 보장해 줄 수 있다. 과잉경쟁의 문제는 1,2등급 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② 수능 절대평가와 함께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025학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성취평가제도 동시에 전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역시 입시 현실에서 고민이 생기는 지점이다. 고교 내신의 변별이 떨어질 경우에, 변별의 압력은 수능과 대학별고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성취 7등급제, 또는 성취 9등급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김정빈, 2019)

또 한 가지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해서 상위 등급에 가이드라인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존재한다. A와 B의 비율을 20%, 30% 등으로 제한하자는 취지다. 상위 등급에 가이드라인을 부여하고, 하위 등급은 자유롭게 둔다면, 소위 ‘깎아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성적 부풀리기 논쟁에도 대처할 수 있다. 반면, 성취평가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결국, 1,2등급에서의 변별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성취평가제와 내신 9등급제를 병행하되, 내신 1등급의 비율을 10~15%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취평가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동점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상대평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다.

③ 수능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 현재 수능 정시 40% 이상이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다. 수시최저학력기준을 고려한다면 정시 비율은 최소 5% 이상 올라갈 것이므로 정시는 50%에 육박할 것이고, 수시최저학력기준의 영향력까지 합치면 수능의 영향력은 이를 훨씬 상회하게 된다.

우선, 수능 정시 비율은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서 자체 조절하도록 한다. 그리고 쉬운 수능의 기초를 유지하고, 수시최저학력기준은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논술형 수능과 같이 수능의 질이 좋아진다면 내신 평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의 수능체제에서는 그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답이다.

④ 통합사회, 통합과학과 선택과목의 사탐, 과탐을 묶어서 여기에 한해 논술형 수능을 도입하는 것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기수(2017). 학생부전형의 성과와 고교현장의 변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포지엄 자료집.
- 강원일보(2018.4.26.). 수능절대평가 찬반 기자회견 보도.
- 강태중(2017). 학교교육과 평가, 그 미래방향을 모색한다. 교육을바꾸는사람들토론회자료집.
- 교육부 공식블로그(2018). 외국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 사례.
blog.naver.com/moeblog/221237387890.
- 국민일보(2018.5.10.). 서울소재 10개 사립대학 입시 결과 보도.
- 김지하 외(2017).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우(2013). 기로의 성취평가제 어디로 갈 것인가. 좋은교사운동 정책토론회 자료집.
- 김진우(2017).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조승래·좋은교사운동 정책토론회 자료집.
- 더미래연구소(2018).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 보고서.
- 동아일보(2016.7.15.) 자율동아리 참여율 보도.
- 베리타스알파(2018.2.20.). 학종반영요소 보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7.9.28.). 사교육실태 보도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7.2.10.). 대입제도 보도자료.
- 송기석·한국교육행정학회(2017).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해법 탐색.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 오마이뉴스(2016.10.10.). 학종엔 교실 혁신의 힘이 있어요.
- 유발하라리(2017). 『호모데우스』. 김영사.
- 조선일보(2015.8.24.) 재수생 비율 보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 학생부전형의 성과와 고교 현장의 변화. 심포지엄 자료집.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2009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
- McMillan, J. H. (2014). Classroom assessment: pearson new international edition: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standards-based instruction. Pearson Higher Ed. [손원숙, 박정, 강성우, 박찬호, 김경희 역 (2015). 교실평가의 원리와 실제: 기준참조수업과의 연계. 서울: 교육과학사].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폐해

강 태 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필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원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MEMO

4차 토론회

학생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 론

- 토론문
(노기원 상명고등학교 교사)
- 학생평가, 교육적인 방안을 찾자!
 - 교육의 질 제고, 실효성있는 정성평가 방안의 모색 -
(조현영 인하대학교 교수)

토 론 문

노 기 원 (상명고등학교 교사)

1. '학생평가, 교육적인 방안을 찾자(홍순희)' 토론

이 글은 학생평가의 교육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필자는 평가는 학생의 발달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과정중심 평가와 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학생 개인 간 상대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정한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수업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소통하면서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이 수업이고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학교는 생물학적인 나이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성장한다는 전제 아래 나이와 생애주기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초등학교는 아동기에 해당하고 중학교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생물학적 나이에 따라 학년제를 두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학생들이 현 단계에 필요한 지적 성취를 이룩해야 다음 단계에서 수학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지적 성취, 즉 수학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이 측정이 바로 평가(시험)인데 이는 당연히 성취평가, 즉 절대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즉 평가는 학생들이 다음 단계에 수학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기에 일정한 수준의 성취를 이루었는지 만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평가는 원래 성취평가, 즉 절대평가가 타당하며 상대평가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필자의 평가에 대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라는 근본 전제 아래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수업과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재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선행학습 금지법 명목으로 평가 시기 등을 통제하는 교육부의 행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 선행학습은 사교육을 통해 수학과 영어와 같은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문제임에도 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교 내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만을 문제 삼고 있고, 특히 이를 교과외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모든 교과외의 선행학습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수업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과정중심 평가에서의 왜곡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필자 또한 평가는 과정중심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과정중심 평가가 ‘백워드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내지 교육청)가 교사들에게 연수를 하고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로 이루어질 때 과정중심 평가가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수업을 설계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정중심 평가가 학생의 발달을 중시하면서 ‘수업이 곧 평가다’라는 말이 유행하였는데, 이를 일부 교육청이 행정적인 지침을 통해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부 교육청은 과정중심 평가를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로 왜곡하여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 문서, 재구성 계획서,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을 강요하여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교육청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수행평가도 정상분포 곡선에 맞추어서 점수를 부여할 것을 행정적으로 강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학생발달을 맞추어 교육하려는 교사의 노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섯째, 학부모의 민원을 감당하려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행정적인 통제에 의해 과정중심 평가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지필평가 방식을 선호하고 수량화된 수행평가 방식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수업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선 필자 또한 처음 겪는 일이라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장과 교육부(교육청)의 소통의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필자는 현재 학생평가를 둘러싼 문제점은 결국 새롭고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평가의 모델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교육부(내지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침으로 일률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도록 할 때 교육과정과 평가가 왜곡될 수 있음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률적인 행정지침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사의 수업과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훼손하고 행정적인 지침에 맞추어서 형식으로 교육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평가도 제대로 구현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달 중심으로 평가에 대해 예시를 하면서 바람직한 수업과 평가에 대한 일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우선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교사가 학생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목표를 변경하여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진 경험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수업에 있어서 속도와 수위 조절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나온 진도 계획 그대로가 아니라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여 수업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인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 내용 또한 교과서 그대로가 아니라 교과서에 없는 수업 자료도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인 경험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런 바람직한 수업과 평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수업 방법의 재구성을 6학년 사회 과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즉 교사가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

떻게 배울 것인지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이 점은 필자의 글 참조)

결국 필자의 대안적인 수업과 평가에 대한 모델 제시는 교사가 수업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과 함께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발달과 수준 정도에 맞추어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러한 대안적인 수업과 평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 정책과 방안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입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이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둘째로 학교 규모와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화이다.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제기로 교육 환경을 위해 당연히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셋째로 교원학습공동체의 활성화이다. 이는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평가가 현장에 들어오는 통로로써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가령 과정중심 평가라는 혁신적인 교육이 들어오기 위해선 교육부(교육청)의 행정지침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런 모델을 소개하고 이를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연구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중심학교 운영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업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수업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필자는 학생평가의 교육적 방안을 찾기 위해서 혁신적 교육방안이 단지 교육부(교육청)의 행정지침과 관료적 통제를 통해서 이를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안된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의 교육과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교육적 전환이 필요함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다고 판단된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필자의 주장은 매우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수행평가가 학교 현장에 들어올 때 각 교과목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행평가를 할 것을 행정지침으로 들어옴으로써 수행평가의 원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숙제가 되어 학생들을 힘들게 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리고 서·논술형 평가의 경우도 행정 지침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할 것을 학교 현장에 강제함으로써 서·논술형을 가장한 단답형 평가라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는 교과 특수성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행정지침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평가의 비율 또한 그 지침으로 해마다 달리 내려져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 자율성은 사라지고 교육부(교육청)의 행정지침을 관철하는 전달 벨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혁신적인 교육과 평가 방안이라도 이를 행정지침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과와 특성에 맞게 현장 교사와의 소통 아래 서서히 학교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혁신학교에서 해오던 ‘거꾸로 수업’이 일반고의 현장 교사들 사이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교육청의 행정지침이 아니라 특정 모델이 확산되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수업 방식이 정착되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학생평가의 경우에도 특정한 교육적 모델이 현장에서 확산되는 방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의 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즉, 혁신적인 교육과 평가 모델이 각 교과에 따라 어떤 모습을 보이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현장 교사와의 소통 아래에서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모델이 교육 현장에 서서히 확산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교원학습공동체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여 특정 모델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필자의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평가 또한 현실에서 입시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입시와 이런 평가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령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초·중학교와는 달리 대학 입시에서 내신 성적이 변별 수단이 되고 있는데 성취평가(절대평가)제라는 전제 아래 진행되는 과정중심 평가가 고등학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교에서 내신이 절대평가로 될 경우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내신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내신이 아니라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의 중요성이 대두될 수 있고, 이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이 등한시되고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로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옮겨가게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과정중심 평가가 달성하려는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과정중심 평가가 초·중학교와 달리 고교 교육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2.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폐해(강태중)’ 토론

우선 이 글은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역사적 경위를 추적함으로써 이 제도가 가진 의미를 밝히고 있는 점에서 이 글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의 본래적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 필자의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기로 하겠다.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적을 비롯한 다양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이것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는 학생이 학년을 올라가면 이전에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파악해야 교육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이를 보여주는 것이 생활기록부이다. 즉 학생의 성적이나 출결 그리고 학생의 학교생활 등을 기록한 생활기록은 학생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학생 지도라는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위해 필요한 장부라 할 수 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서 교과내신 성적은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수학 능력의 정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생활기록부가 현실에서는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장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필자는 밝히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5.31 교육개혁’을 통해서 생활기록부를 학교생활기록부(종합생활기록부)제로 전환하면서 대입 전형의 기본 자료의 하나인 내신성적(교과성적)을 학교생활기록부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았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에 교과내신만을 대입에 반영하던 것을 교과내신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 인성 및 생활 상황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출결을 비롯한 봉사활동, 특별활동, 대회 수상과 각종 자격증과 기타 특기사항 등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기록하여 대학의 선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김대중 정부 시절 학교생활기록만을 활용하는 전형을 만들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 제도를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을 통해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을 학생부 전형으로 공식화하였다. 물론 이때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름으로 변경되어서 수시 대입의 주된 전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리고 2019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벌어졌던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바탕을 둔 대입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을 압도하고 있고 이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 전형의 주된 전형으로 자리잡기 위한 정당화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임을 필자는 지적한다. 그 하나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이다. 이는 내신과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입 전형에 활용하면 교과 공부와 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학교 교육에 충실한 것만으로 대입 준비를 할 수 있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의 주요 전형이 되면서 학교 교육관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야기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학교 교육 일체를 ‘기록’으로 귀결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록’은 결국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표시이며 이 표시들을 학교 교육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결국 기록에 의해서 대학교육의 기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록을 위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 필자 주장의 요지이다. 이는 교육 활동의 ‘본말의 전도되는 현상’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원래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지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의 주요한 전형이 됨으로써 거꾸로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위해서 교육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본말의 전도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의 주요 전형이 되면서 학교를 끊임없이 부패와 갈등에 휘말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양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지표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그 결정 과정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 제도는 교과 시험만이 아니라 비교과 활동을 포함한 학교 생활 전반에 부패와 왜곡 현상을 불러왔다고 한다.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는 것만이 아니라 적성이나 인성 심지어 진로 계획마저 사실과 다르게 입시에 맞추어 왜곡하는 현상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필자는 이런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는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교육 주체 간 의심과 견제 그리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학생(학부모)은 자신의 기록이 보다 잘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또한 기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며 이를 알고 있는 교육부(교육청)는 감시 장치를 두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4월에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부정적 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 한 것은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둘째로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의 주요 전형이 되면서 생겨난 교육 주체 간 상호 불신과 견제 그리고 경계하는 상황이 일반화되면 이는 근본적으로 교육적 관계를 파괴한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첨예한 입시 경쟁의 판가름 도구가 되면 그 도구를 관리하는 교사는 학교 교육이라는 게임의 심판(또는 기록자)일 뿐이고 학생은 그 게임에 들어선 선수일 뿐이기에 이 둘은 교육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게임판을 벌여놓고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운영하는 데만 신경 쓰는 형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제도는 교육에 대한 사회의 정의를 뒤틀어 부패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학생들은 기록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록되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심지어 기록을 위해 교사와 협상하거나 다툼을 벌인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기록을 위해서 교육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진정 교육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학부모(가정)는 기록을 통해 입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들여서 생활기록부를 디자인하는 전략도 짜고 때로는 부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기록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필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입시의 주요 전형이 되면서 학교 교육이 점수나 기록으로 파편화되어 총체성을 잃게 되었으며 눈에 띄고 증빙이 가능하도록 학교 생활을 연출하는 것을 교육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학교생활기록부 제도는 학교에서 교육을 증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을 생각한다면 그 제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데 필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폐지하여 입시에서 주요 전형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대신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를 폐지하면 수

능이나 대학별고사의 비중이 강화되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제도가 입시의 주요 전형이 되면서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는 폐해와 비교육적인 문제에 대한 필자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다. 현재 학교에서는 필자의 주장처럼 많은 교육 활동이 기록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이런 기록은 대학 입시를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령 소위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위한 활동이라고 여겨지는 (자율)동아리 활동의 경우 이런 활동이 대학 입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학생들은 당연히 관심이 없다. 현재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 없는 적성과 흥미를 만들어서 관심도 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진로의 경우에도 대학 입시에 맞추어서 수시로 기록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을 좋게 기록하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활동을 기록해주기를 요구하는가 하면 자신의 활동을 과장하기도 하고 교사를 속여서 기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입시를 위해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를 흔히 ‘자소설’이라고 한다. 이는 자기소개하면서 자신의 활동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서술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즉 현재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을 별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는 학생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교와 교사들도 자신의 학교의 학생이 좋은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학생의 활동을 만들고 이를 미화하여 서술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필자의 지적처럼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지면서 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이를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간단한 서술 형식에 대해서 조차도 일일이 간섭을 하는 지경이다. 분명히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필자의 주장은 타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필자의 주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필자가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입시 제도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한계라 생각된다.

현재의 대입전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학생부교과전형(이하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그리고 수능 전형이다. 이 중 교과전형과 학종은 수시모집에서 활용되고 있고, 수능전형은 정시모집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학생 선발은 정시의 수능전형보다는 수시모집의 교과전형과 학종의 비중이 더 높다. 또한 교과전형과 학종의 경우 전국적 차원에서는 교과전型的 비중이 높으나 서울지역의 대학으로 한정하면 학종이 교과전형보다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필자가 주장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입시에서 온전히 활용하는 것은 학종으로 볼 수 있다.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에서 교과내신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비교과 활동의 기록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학종에서 학생부를 활용하는 것은 교과내신에 더하여 다양한 비교과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기록’은 교과내신 성적만이 아니라 각종 비교과적 요소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주지하듯이 비교과적 요소로는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국내 수상과 자격증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 사항과 요즘 중요시되는 교과 세부능력 등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과 공부만이 아니라 각종 비교과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부에 조금이라도 더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이런 기록을 위하여 교사들과 게임을 벌이고 있으며 결국 거의 모든 교육활동이 기록을 위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학종의 긍정적인 요소라 생각되는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전적으로 대학 입시를 위한 것으로 이는 학생들의 진정한 흥미와 적성이 아니라 대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학종을 축소 내지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학종을 폐지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각종 기록들이 대학입시를 위해 필요치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현재처럼 기록을 위한 교육 활동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필자가 지적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체제의 문제점들이 대부분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의 주장처럼 학생부 자체를 폐지하면 수능과 대학별고사 등이 중요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역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즉, 학교에서 행해지는 수업은 등한시되고 수능이나 대학별고사에 교육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어 학교 교육은 형해화될 것이다. 그리고 수능과 대학별고사에 맞춘 사교육이 창궐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필자의 문제의식을 살리면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는 ‘교과전형’이 대학 선발의 가장 주요한 전형으로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수능은 말 그대로 완전히 자격고사화되고 학생 선발은 교과전형을 활용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교과내신이 학생 선발을 위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교과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면 교과성적을 잘 받기 위해 오직 학교 수업 활동에 학생(학부모)이 충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교사들도 대학별고사나 수능을 위한 문제풀이 수업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에 오직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학교 수업활동에 열중하게 될 것이다.

교과전형으로의 선발을 통해 모든 교육 주체들이 교육과정에 입각한 학교 교육에 충실하게 되는 조건이 마련되면 그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개혁에 교육 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혁은 교과 내용과 수준의 적절성과 수업 방법 개선 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목표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과 수학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라면 교과 내용이 이런 목표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교과 수준이 학생들이 배우기에 적절한지 그리고 수업 방식이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토론과 발표 등의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생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있는 분야에서 학교 활동 즉 비교과적 활동은 입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학종으로 인해 있지도 않은 관심과 흥미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이 원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오롯이 입시와 무관하게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은 학생들의 정서 발달을 위한 것으로 이는 입시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오직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전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종을 폐지하고 교과전형으로 선발하게 되면 현재처럼 입시에 종속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입시에서 해방시켜 기록을 위한 교육 활동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3. '대입 관련 학생평가(내신/학종/수능) 개선방안(김영식)' 토론

필자는 대입 개선 방안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배우의 질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 둘째로 과잉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 셋째 학생과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 넷째 사회적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입시제도로 논술형 수능 도입의 전제 아래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논술형 수능의 도입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달성 여부를 타당성 있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대학이 논술형 수능을 선호하라는 점, 넷째로 외부평가로서 객관적인 학업 성취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수능체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물론 필자는 논술형 수능의 도입으로 우려되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논술 사교육 유발 우려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런 우려는 학교 교육을 통해 논술에 대비할 수 있는 신뢰를 줌과 동시에 논술의 난이도를 조절하면 이런 사교육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둘째 “논술이 모든 학생들의 발산적 사고를 견인할 수 있는 평가인가?”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논술형 수능이 도입되면 학교 수업과 평가가 변화할 것이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에서부터 사고력과 논리력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다. 셋째로 논술 시험 채점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우려인데 이는 최소 3명이 평가를 한다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필자의 이런 견해가 과연 타당한지는 재고해보아야 한다. 필자는 수능이 학교 외부평가로서 객관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하면서 내신은 학교마다 각 기준이 다르기에 내신으로 학생의 학업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필자가 기본적으로 내신을 불

신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논술형 수능이 안착되려면 학교 교육 과정이 논술에 대비할 수 있어야 논술형 수능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학교 내신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에 기초한 내신을 불신하면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논술형 수능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수능)에서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연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것이 한국적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적 상황의 차이를 무시하고 논술형 시험을 곧바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논술형 수능이 도입되고 이것이 대입에서 중요시된다면 논술을 대비한 사교육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학교 수업이 무력화될 우려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수능을 논술형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개혁하고 학교 수업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수업의 혁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논술형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안착이 된다면 수능을 논술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아직 요원한 일이고 현 시점에서 논술형 수능 도입을 꺼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 논술형 수능의 도입은 교육의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논술 시험의 경우 학생 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실제로 경험에 의하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논술형 수능이 도입되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사교육을 잘 받는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필자는 논술형 수능의 도입을 전제하면서 대학 입시를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두 트랙으로 단순화하자고 주장한다.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자는 주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나 과연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두 트랙으로 입시를 단순화하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검토해보아야 한다.

주지하듯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교과내신과 더불어 정성평가에 기반한 비교과적 영역을 반영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학종은 이미 앞의 토론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듯이 ‘기록을 위한 교육’이라는 학교 교육의 왜곡 현상을 불러오는 것으로 이는 향후 폐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기에서는 기록을 위한 교육이라는 학교 교육의 왜곡의 문제와 더불어 학종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토론을 해보겠다. 학종의 경우는 ‘깜깜이 전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형이 사회적 공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학종이냐? 수능전형이냐?는 논란에서 공정성⁶⁸⁾의 문제가 가장 커

68) 현 정부에 들어와서 학종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학종의 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종의 정성적 평가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라 하여 객관적인 평가인 수능전형을 늘리겠다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교과전형을 늘리는 것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교과전형은 교과내신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과 같이 객관적인 평가인 것이다. 그런데 이

다란 쟁점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학종과 수능 전형 모두 공정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수능의 경우에는 전국 모든 학생이 경쟁하여 등급을 내는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강남이나 특목고, 자율고(자사고) 학생들이 수능에서 유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들 학생들은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계층들이어서 사교육을 비롯한 문화자본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종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학종의 경우 교과내신의 경우에는 단위학교 학생 간 경쟁으로 등급을 매기지만, 비교과적 요소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경쟁 상대자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학종의 경우에도 강남이나 특목고, 자율고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종은 깜깜이 전형으로 대학들이 선호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즉, 학종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주로 수시선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들 서울의 소위 명문대들은 이 전형을 통해서 강남이나 특목고, 자율고 학생들을 주로 선발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⁶⁹⁾ 또한 학생부 디자인이라는 말에 알 수 있듯이 이 또한 사교육의 힘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종과 수능이 강남이나 특목고 자율고 등 부유한 계층에 유리한 전형이라는 사실은 필자의 통계표에서도 드러난다. 필자의 통계자료를 보면 학종과 수능전형은 일반고에 비해 특목고, 자율고(자사고) 등의 합격 비중이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교과전형에서는 자율고와 특목고의 비중이 매우 낮고 일반고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과전형의 경우 단위학교 학생 간 경쟁으로만 등급을 매기고 이를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교과내신을 받기 힘든 특목고와 자율고가 불리하고 일반고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교과전형의 내신은 전국의 어느 곳에 있는 학교이든지 상관없이 그 내신 성적이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특목고와 자율고나 강남지역의 학생에게 불리한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교과전형이 가장 사회적 공정성에 부합하는 전형이고 이에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학종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상하게도 현 정부는 교과전형 확대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에 나온 ‘교육의 기회균등’ 정신이 바로 사회적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능은 사교육 등 문화자본이 우세한 부유층에게 유리한 전형이다. 이에 비해 교과전형은 전국의 모든 학교의 내신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보다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과전형이 학종이나 수능전형보다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지하듯이 수능전형은 사교육의 위력이 가장 강한 전형으로 부유층에게 유리한 전형임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69) 1995년 5.31교육과정에서 표방된 ‘수요자 중심 교육’은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학들도 시장에서 재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있었다. 대학들이 시장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은 크게 등록금과 기부금을 받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이에 대학들은 강남으로 대변되는 부유층의 자제들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 이들은 등록금을 인상하여도 잘 낼 수 있는 계층이자 졸업 후 기부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서울의 명문대들은 수시모집에서 교과전형을 축소하고 학종으로 주로 선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과전형은 강남의 부유층에게 불리한 전형임을 이들 대학들은 잘 알고 있으며 이에 학종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필자가 주장하는 수능종합전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필자는 수능종합전형을 논술형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된 가운데 수능 점수와 학생부의 정성적 기록을 결합하여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수능종합전형에서 수능이 논술형이라면 내신은 무엇을 말할까? 필자는 내신은 정성평가를 의미한다고 한다. 필자가 내신의 정성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지필평가의 내신을 논술형 수능으로 흡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신은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아마 현재의 과목별 세부능력과 같이 교과별로 학생들의 특성이나 학업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핵심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정성평가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맞물려 수행평가의 기준을 성취기준에 맞게 정립하고 교사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필자는 수능종합전형을 주장하면서 수능과 내신에 대해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필자는 수능과 내신에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 학생 변별의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학에게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필자는 수능종합전형에서 수능과 정성평가를 기초로 하는 내신이 절대평가제로 운영되면 선발에 있어서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 약화를 초래하고 이에 대학에게 학생 선발권의 자율성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논술형 수능이 절대평가로 그 변별력이 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논술형 수능이 중요하게 될까? 그리고 이는 내신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입시에 모든 것이 맞추어진 현실에서 학교(교사)와 학생(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대학별고사)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결국 이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하여 논술형 수능을 도입하려는 필자의 의도는 무산될 것이고 논술형 수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술형 수능을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논술형 수능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 또한 학교의 수업을 부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논술형 수능이 입시에 중요하게 되면 모든 교육 주체는 수능에 맞추어 교육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논술형 수능 전형이 중요하게 된다면 논술형 수능의 특성상 이에 대비하는 사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문화자본이 우수한 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이는 사회적 공정성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의 교육은 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입시에서 중요시되는 요소에 모든 교육 주체의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내신이 강화되자 서울의 대학들이 내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논술전형을 도입하였는데 이에 교육 주체들 사이에서 논술 광풍이 불어왔다. 물론 이는 논술 사교육 시장을 크게 확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논술전형은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입시제도의 개혁은 무엇을 중요시하고 어떤 교육을 강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수능을 완전한 자격고사화하고 교과내신만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수능의 완전한 자격고사화는 수능에서 일정한 점수를 넘으면 대학에 갈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방과후 수업과 자율학습을 하는 비정상적인 학교 교육의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그 대신 수능에서 패스를 할 수 없는 하위권 학생들이 그야말로 대학수학능력을 갖추 수 있는 교육을 하게 되는 극히 정상적인 교육적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수능에서 패스를 하여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얻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대학을 선택하게 하면 소위 말하는 스카이 학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릴 것이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를 두어야 하는데 학생들의 선발은 바로 교과내신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교과내신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면 교사들은 입시에서 보다 자유로워지게 되고 오직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충실히 수업하고 평가를 하면 된다. 왜냐하면 대학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평가한 교과내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교사가 해야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충실히 수업하고 학생을 평가하여 성적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들은 교과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학교 교육에 충실히 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교 수업과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교과내신은 절대평가와 더불어 상대평가를 동시에 병기할 수밖에 없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교과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내신의 약화를 초래하여 수능이 중요시되거나 대학별고사 등을 불러와서 교육 주체들이 학교 수업에서 관심이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상대평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교과내신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의 교육 개혁은 교육과정과 수업을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혁은 “교과 내용이 민주시민 양성에 적절한지, 그리고 교과 수준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지, 나아가 일방적 강의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토론과 발표와 같은 수업 방식의 혁신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교육과정의 혁신이야말로 지금 진정 필요한 교육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보면 논술형 수능과 학종 두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MEMO

학생평가, 교육적인 방안을 찾자!

- 교육의 질 제고, 실효성있는 정성평가 방안의 모색 -

조 현 영 (인하대학교 교수)

교육 장면에서 학습자의 맥락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학습에 가까워질 수 있다. 교육적 맥락에 대한 판단은 현장의 교사가 가장 잘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업과 평가는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과 평가 자율성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성의 확대를 통한 교육의 효과는 대입이라는 선발과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반면에 선발과 경쟁이 여전히 강력한 교육의 맥락이 되는 현재의 우리 교육 현실에서 이러한 자율성의 확대는 불가피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잔존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로 인해 국제 인증 교육과정의 평가 방식 또한 일정 부분 약속과 규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학습자 경험을 인정하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택하고 있다. 선발과 경쟁에는 불가피하게 유희리의 조건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의 적정한 수준이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매우 복잡한 문제이지만, 그러한 약속을 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교육 경험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책임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평가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전반적인 교육의 질제고를 위해 바람직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우리의 평가가 갖는 문제는 사실상 최근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갖는 문제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까지 교육 현장은 교사의 자율성, 학생의 자율성을 비롯한 다양성의 확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확대된 경향이 있다. 물론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인권 문제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전히 선발과 경쟁이 필요한 대입이라는 영역에서의 약속과 가치판단의 방식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명분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에서 모든 학습과정에 대한 무분별한 기록이라는 방식을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교육 활동의 질은 담보되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덧붙여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와 학교문화는 교육내용과 평가 방식의 경직성에 대해 더욱 괴리감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명분하에 교육 활동의 질적 차이가 간과되는 평가의 방식은 학습자와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학교 교육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낳았다.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교육적으로 가치있게 경험했는가를 평가하고 기록할 수 없는 지금의 학교 문화, 즉 공정성이라는 명분하에 여전히 살아있는 객관성의 신화는 학교 학습의 진지함과 품위를 잃

게 만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개별성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보편성이라는 품위를 저버리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폐해에 대해 논의해 주신 강태중 교수님의 지적은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의 평가 논의들은 발달적 평가관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학교생활기록부가 교육의 결과를 기록하고 선발의 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교육의 책무성과 학습자의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서도 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장치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평가와 이에 대한 기록의 장치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솔로몬의 지혜 이상의 해결책이 요구되는 난제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의 폐해는 그 존재 때문이 아닌 그 기록의 방식 때문이라고 본다.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강태중 교수님의 지적대로 행동주의, 실증주의를 기반한 양적인 지표 이상의 정성적 지표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 교사의 맥락적이고 정성적인 학습의 과정을 온전히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는 사실 기반의 기록에 갇혀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의 방식은 전언한 바와 같이 경험의 양적인 합산만을 통한 지나치게 과도한 정보의 나열로만 되어있어 학습자의 경험의 교육적 수준을 유도할 수도 정확하게 평정할 수도 없는 불필요한 기록들이 난무한 형편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홍순희 선생님의 과정중심평가와 협력활동, 백워드 교육과정에 대한 지적 또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과정중심평가의 방법이 학습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 다만 그것이 꼼꼼한 기록의 대상으로서 평가의 방식으로 일정 부분 정착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장에서 최근들어 보다 강조되는 협력활동과 참여형 학습의 목적 또한 학습자들의 협력과 참여를 보다 꼼꼼하게 평가하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모두 철저히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관찰하고 평가 및 기록하라는 논의로 이어진다면 홍순희 선생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백워드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평가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장하였다는 지적과 다르지 않게 된다. 그런데 현장에서 강조된 백워드 교육과정이 평가중심의 교육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백워드 교육과정이 강조되기 이전부터 우리 현장은 평가 중심의 환경이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만 백워드 교육과정의 강조가 또다시 평가 횟수의 확대로 이어지는 정량적 평가의 확대로만 정착될 수 밖에 없었던 문제,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는지 되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가가 우리의 교육 환경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당분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백워드 교육과정의 강조 이후 평가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사실은 평가가 갖는 교육적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교육적 질을 제고하는데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백워드 교육과정이 현장에 미친 부작용은 평가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장했다는 점이 아니라 기존의 평가체계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평가의 비중만을 더 키웠다는 점이다. 과정중심평가, 협력활동은 학습자의 학습과정이

갖는 정성적 측면을 수업에서 보다 잘 관찰하고자 하는 학습 과정의 구체화를 위한 도구이자 피드백의 도구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백워드 설계 역시 평가의 강조가 아닌, 학습의 결과로서 구체화된 산물, 다시 말해서 학습자 머릿속의 모호한 상태들을 적극적으로 교사가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서의 평가 과제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궁극적으로는 학습과정의 정성적 측면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입 관련 학생평가 개선방안에 대해 폭넓게 다루어주신 김영식 대표님의 논의 역시 매우 다각도로 대입제도를 분석해주셨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대표님이 지적하신 수능과 학종의 문제는 두 평가방식을 사실상 수험생이 선택해야 하는 선택지가 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확대시켰다고 보여진다. 수능 100%로 대학을 간다거나 수능 최저등급을 없애자는 주장은 결국 수능과 학종을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것이다. 수능과 학종은 그것이 추구하는 평가의 목적이 다르다. 수능이 외부평가이고 학종이 내부평가라고 보는 것은 단순히 평가 주체가 다르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습의 과정을 중심으로 개별화된 학습의 가치를 평가하느냐, 학습의 결과를 봄으로써 학습 결과의 보편적 상태를 지향하느냐 라는 것처럼 평가의 목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외부평가인 수능에서 볼 수 없는 개별화된 학습의 정성적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두 가지의 평가는 학습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 놓인 평가인 것이다. 따라서 수능과 학종은 학습자 특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학습과정이 온전한 배움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화학적으로 잘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수업과 학습 과정의 유도체로서 평가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학생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표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수능의 논술형을 비롯한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수능 체제 개편을 통해 수능과 수행평가가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교육의 과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종의 비교과 활동의 체계화 방안도 시급하다. 초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적는 방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단순히 기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정해주는 방식 수준의 개선일 뿐 근본적인 학습 경험의 질관리를 위한 방안은 아니다. 지금의 비교과 활동에 대한 기록방식 또한 교과와 마찬가지로 결국 정량적 방식의 평가, 즉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부로만 이해될 뿐 그것이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 교육적 활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설사 교사가 그러한 정성적 측면을 기록했다고 해도 그것을 대학에서 확인하고 신뢰하기란 쉽지 않다.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의 반영이 학생의 다양한 경험을 장려할 수 있다고 해도 선발과 경쟁이라는 대입 환경에서 비교과 활동을 대입을 위한 항목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그 활동의 질적 차이를 교사가 관리하고 평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록이 납득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비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기록에 대한 납득과 신뢰의 문제는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평가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대표님은 이에 대하

여 크게 두 가지의 제안을 하고 계신데, 한 가지는 대학의 선발권 확대이다. 하지만 토론자는 이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과연 대학으로 선발권을 이양시킨다고 학교의 경쟁이 완화될까? 학교 안에서의 경쟁은 완화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대학별 선발조건을 채우기 위한 개별적 대입준비 과정은 학교 밖에서 더욱 활성화될 위험성도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로 인해 학교의 기능은 더욱 약화될 위험성도 갖게 된다. 사교육 문제를 차치하 고서라도 대학으로 선발권을 이양시킨다는 것은 학생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 생각하며 결국 이는 우리 학교 교육의 퇴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학습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학습의 과정을 지켜본 교사이다. 그 과정에 대한 평정을 해야 하는 주체도 교사가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기록으로 대학에서 학생의 역량을 가늠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결과중심의 평가로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와 상반된 관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의 교사별 평가 혹은 학교별 평가의 무분별한 확장 또한 재검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학습의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사의 평가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이 학교 간 격차와 선발에서의 유불리함을 만드는 수준이라면 그것을 조정하고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장치는 평가의 공정함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과 수준을 보편적 수준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도구로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개별 교사의 평가를 감수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교사들의 평가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오히려 교사들의 평가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교사들의 정성적 평가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고 교사 혼자서 평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지금의 평가 환경은 사실상 우리의 미래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창의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지식의 무조건적인 다양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양성 가운데에서도 그것의 질적 수준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것은 개별성이 어떻게 보편적 가치와 맞닿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정성적 평가 방식의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결국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강조하는 ‘공감’의 능력이 어떻게 평가 제도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일 것이다. 교사 개인의 정성적 평가라는 주관적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현재의 문화는 결코 교사 개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교사의 정성적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공감의 영역을 통해 정성적 평가를 장려하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보완적 체계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평가로 인해 교사가 공격받고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교육의 질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